

39건은 손도 못댔는데... 의문사 덮을건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의 조사활동 시한 연장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의문사위의 회생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은 16일로 종결된다. 조사시한 연장 등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국정감사 때문에 다음달 5일까지 본회의 일정이 없어 시한연장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일단 조사가능은 마비
의문사위는 내년 3월까지 존속할 수 있지만 조사가능은 마비된다. 의문사위는 조사 시한 종료 뒤 1개월 내에 대통령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5개월 내 보고서 작성 및 각종 권고조치 이외의 활동만을 하도록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원이 '굳이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굴절된 역사 바로잡기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렸다는 시민단체 등의 비난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면 전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가 12일

■ 진상규명위 조사활동 내일 종료

정치권 끝내 무관심 시한연장안 상정 못해

술한 의문사가 진상규명이 안된 채 역사의 뒤안길에 묻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의문사 조사대상 사건 83건 중 인정 11건, 기각 21건 등 44건만 결정됐고 나머지 39건은 조사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여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극적 회생 가능할까
한편으로는 의문사위가 존속하는 내년 3월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어 회생의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이창복(李昌福)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이 각각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개정안 통과 전망이 밝지 않은 않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

“필요하다면 시한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도 이점과 궤를 같이 한다. **의문사위 권한 논란**
시한 연장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초 2차 의문사특별법 개정 당시 법사위 의원들은 조사관에게 수사권 부여 등 권한 강화 조항을 반대하고 조사기간 연장과 진상규명 불능 조항만을 신설해 법개정에 동의한 바 있었다. 이번에도 시한 연장만이 이뤄질 경우 수사권, 소환권 등 의문사 권한 강화를 강하게 요구해온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 법개정 자체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남긴 진기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범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16일 2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관 57명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최종길 교수와 김준배, 임기윤씨 등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죽음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위법한 공권력 개입의 결과임을 밝혀내는 뜻 깊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반관반민' 조직이다 보니 갈등도 많았고 기간 부족에다 조사권한 미비까지 겹쳐 보다 많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진상규명위의 22개월간의 활동을 각종 통계로 정리해본다.

◆진정 현황 =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진정 접수된 83건을 피진정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국방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각각 20건과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활동 기간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는 국가정보원이 가장 많았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그 뒤를 잇는 '불명예'를 안았다.

진정 접수된 사망자들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0대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직업별로는 군인이 25명으로 학생(20명)보다도 더 많았다.

◆참고인 등 조사 = 지난 2000년 10월17일 항해를 시작한 진상규명위는 이듬해 정식 조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달 초까지 모두 4천87명을 참고인이나 피진정인 등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시켜 조사했다.

출석이 불가능한 참고인 1천526명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이 직접 찾아가 조사를 벌였는데 이를 합할 경우 위원회가 조사한 참고인 수는 총 5천613명에 달한다.

현장 및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연인원 4천383명의 조사관들이 2천164회에 걸쳐 3천248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38만4천254km로 지구둘레(4만km)를 9바퀴 이상, 경부고속도로(428km)를 897번 이동할 수 있는 엄청난 거리다.

또 참고인은 아니더라도 사고 현장이나 관련기관에서 만나 조사를 한 연인원은

3만909명에 달하며 참고인 의 신원파악을 위한 주민조회도 8천64 건에 달했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국내 법의학자를 대상으로 모두 38차례에 걸쳐 법의학 적 소견을 의뢰했으며, 영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의 저명한 법의학자 5명 을 상대로 모두 39차례에 걸쳐 법의학 적 소견을 의뢰했다.

조사관들이 수집한 자료의 양은 사건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700여쪽에서 많 게는 그 4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986년 대공 수사관 3명에 의해 연행된 지 8일만에 야산에서 유골이 발견 됐던 인천 도시가스 노동자 신호수씨 사건의 경우 자료분량이 3천200쪽으로 최고를 차지했다.

14일 현재까지 결정이 이뤄진 52건 가운데 경찰 관련 의문사를 조사하는 조사 2 과 관련사건은 21건이고, 군 관련 의문사를 조사하는 조사 3과는 17건이며, '진상규 명 불능' 결정된 사건은 2과와 3과가 각각 5건씩이다.

◆각종 조치.경비지출 = 검사 3명과 전직 대통령 2명 등 모두 9명에게 동행명령 장을 발부했다.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와 전향공작 도중 교도소에서 사망한 최석기씨 사건과 관련해 동행명령을 거부한 정모 검사와 조모씨에게는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각각 7 00만원과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문사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 는 보상금의 경우 22개월간 단 2건에 그쳤고, 보상금 수혜자는 3명으로 각 300만원 이 지급됐다.

과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관련자의 양심선언이나 제보 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보상금 지급액으로 미뤄볼 때 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어려웠 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위원회가 현재 입주해 있는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은 매달 약 2천800만원의 임 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전체 근무인원은 조사관 57명을 포함해 모두 92명이다.

이밖에 2000년과 2001년에 집행된 예산은 각각 15억7천여만원과 36억6천5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south@yna.co.kr

(끝)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못한 사회는 자 유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억 율한 죽음들의 진실을 밝혀내 그 흔적이거나 위로해주는 일조차 기피하는 사회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또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정 치인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홍/세/와 빨간 신호등



정처권, 의문사위 기한연장 침묵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미해결 사건을 수두룩하게 남긴 채 오늘(9월16일) 조사활 동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동안 규명위는 주 어진 권한의 부족과 국정원, 기무사, 검찰의 비협조로 열악한 조건에서 조사활동을 벌여 야 했다. 그럼에도 박영두씨, 최종길 교수, 김준배씨, 허영근 일병 등의 죽음에 얽힌 진 실을 밝혀냈다. 이는 공권력에 짓밟히고 군 부대에서 숨진 억울한 사연들이 아직도 숨하 게 숨겨져 있음을 말해준다.

규명위는 지난 12월에 1974년의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부부의 작품이었음도 밝혀냈 다.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은 '사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의자들 이 전기고문을 받고 고백스러워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관련자 8명은 가족 방청 조차 허용되지 않은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 20시간 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 져야 했다.

이 엄청난 사실 확인에 대해 이사회는 분 노하기는커녕 놀랄 줄도 모른다. 젊은이들조 차 장래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부자 아 빠를 꿈꾸'고 있을 뿐이다. '배부른 짐승'을 자랑하는 사회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지금껏 규명위의 조사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라 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못 들은 척 했다. 화려한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흔 한 말로 돈도 많이 들지 않는 이 과제에 결 결을 끼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제부여과 친독재로 얼룩져 정통성이라고 찾을 수 없 는 수구세력에게 '역사의 진실 밝히기'가 곧 '자신의 처부 드러내기'와 만나기 때문

이라는 이유 말고는 그 어떤 이유도 찾기 어 렵다.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나, 밝혀 진 것은 밝혀진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검 찰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나머지는 검찰에 넘기면 된다'? 의문사 규명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투다. '의문 사'는 '의문스러운 죽음'이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죽음이다.

결국 의문사 규명위가 오늘 조사활동을 마감해야 하는 까닭은 수구세력이 해계모니 데에 부닥친다. 역사적 진실의 '보통 티지 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왜 두려워하나

놀랍다. 한국 땅에서 정치인의 일상은 의식 을 마모시키는 것인데, 이제 그조차 '살아남 은 자'의 부채의식을 조금도 느끼지 않게 된 것일까? 설령 부채의식이 없더라도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일지언정 인간이 아니다. 군대에서 죽은 이들의 영정 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을 외면 하고 '내 자식만 아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 면서 자기자식 군대 보내지 않으려는 권세 있고 돈많은 어머니들이 '대지의 어머니'가 아니듯이.

'진실' 밝혀야 화해·용서 가능

남아프리카의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 위 원회'를 꾸렸다. 화해와 용서는 '진실을 밝 히'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종 의 문사의 진실을 비롯해 진실을 밝혀내지는 것은 일제부여 세력과 친군사독재 세력을 심판하자는 것보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 우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고을마다 학살 의 상흔이 남아 있는 이 땅에서 진실을 밝혀 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때 화해와 용서가 가능하고 올바른 사회풍 습이 가능하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그 첫걸 음이다. 바로 그 때문에 수구세력의 강한 반 대에 부딪친다. 역사적 진실의 '보통 티지 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기획위원 hongsh@hani.co.kr

사설

'의문사' 진상위, 국민이 되살려야

국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끝내 외면했다. 결국 의문사에 조금씩 의문이 풀려나가는 상황에서 법에 규정된 시한 때문에 16일로 조사를 중단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해방공간에서 친일파들의 과거를 심판하려다가 좌절된 반민특위의 악몽이 재현된 셈이다.

국회는 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물론이려니와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다음달 초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해 극적으로 개정할 마지막 가능성도 사라졌다. 특히 국회 과반의석을 지닌 한나라당의 책임은 더 무겁다.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한나라당은 법개정안을 외면했다. 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도 이를 관철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니다. 진상조사 활동은 16일로 끝났지만 조사 보고서를 내기 위해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내년 3월까지 상근하면서 위원회

는 존속한다.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법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애초에 의문사법 제정도 유가족들이 찬바람 맞으며 '노숙 투쟁'을 한 결과였다.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다음달에 열릴 국회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이 심사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시위를 비롯해 다각적인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유족들과 사회단체들은 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회창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법 개정 방침을 의원총회로 떠넘긴 뒤 의총에선 다시 당 지도부에 맡겼다. 비단 이 후보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나선 모든 후보들은 명확하게 태도를 밝혀야 한다. 친일 역사를 청산하지 못해 가치관이 크게 뒤틀린 우리 사회에서 의문사마저 덮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유족들과 사회단체들의 싸움에 온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청산은 이제 국민 모두의 몫"

한상범 진상규명 위원장에 듣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유족들과 한나라당이 맞붙고 있다. 유족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유족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부끄러워 않게 행동하라는 지시인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훈심의 위와 같은 사회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유족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정보기관들 너무 비협조 기한 늘려도 별 차이 없을 것

위원회 조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다. 이번 반민특위(추경우)로 위헌법이 구상되고 보니 일부 유족들이 있다. 유족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체를 막아낼 수 있는 것 같다. 위원회는 이번 차원에서 국민에게 과거 군사 권력의 부패한 권력구조와 그 사용법 등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의의와 성과를 인정받아 유족들의 불협조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연세대학교

관련자 조사 불응 많아 규명에 한계

83건중 30건 처리못해

조사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대상 83건 중 53건만 조사를 마쳤다. 이 중 30건은 관련자 조사가 불응하여 규명에 한계가 있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측은 당시 중경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문서고에 대해 남지 조사를 할지 여부를 묻는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관을 맡겨준 국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위원회가 밝혀낸 성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2일 매거주급 영감을 했다. 1974년 김형욱이 구속되고 이 중 중경이 사망할 당시에 인민혁명당 사건이 중경당(부총장)에 의해 조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유족에서 출신 학생회에 사건과 관련된 시신을 담당했던 군 경찰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중요하게 조사한 결과 '인민혁명당 사건이 남조선'이라는 진상을 밝혀냈다. 30년 가까이 묻혀져 있던 진실이 위원회 활동으로 빛을 보게 됐다. 유족들과 유가족들은 법 개정을 위한 재심 청구 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혁당 사건 등 중경 조작 밝혀내"

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위원회는 불교수가 영부인 것으로 발표했던 '유방 간첩단 사건'이 조작이란 사실을 밝혔다. 또 불교수가 기독교 교인도 불교도 아닌 사실도 밝혀냈다. 인혁당 사건이 남조선'이라는 진상을 밝혀냈다. 30년 가까이 묻혀져 있던 진실이 위원회 활동으로 빛을 보게 됐다. 유족들과 유가족들은 법 개정을 위한 재심 청구 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 ▶ 1998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독립 위원회
- ▶ 2002년 8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 30년 묵은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
- ▶ 2002년 12월 대법원 사건 관련 재판
- ▶ 2002년 1월 유족대표단 출범
- ▶ 2002년 5월 유족대표단 출범
- ▶ 2002년 7월 유족대표단 출범
- ▶ 2002년 8월 유족대표단 출범
- ▶ 2002년 9월 유족대표단 출범
- ▶ 2002년 10월 유족대표단 출범
- ▶ 2002년 11월 유족대표단 출범
- ▶ 2002년 12월 유족대표단 출범

未完으로 끝난 의문사 규명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희생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치됐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마감한다. 우리는 2년 가까운 활동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올린 위원회가 시간 부족과 조사 권한 미흡 때문에 '미완'으로 막을 내리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한다.

요즘 연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 위원회는 전체 조사 대상인 83건 가운데 14일 밤까지 11건을 의문사로 인정하고 16건은 조사 불능, 25건은 기각, 1건은 취하로 의결했다. 나머지 30건도 오늘까지는 의결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부족해 '미제' (조사 불능)로 끝나는 사건이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후엔 조사와 의결 활동을 중단한 채 내년 3월까지 대통령 보고와 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그동안 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 조사받다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를 비롯,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청

송교도소 수감자 박영두씨, 녹화사업 관련 대학생 한희철씨,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일병 등의 죽음에 공권력이 개입했거나 사건이 조작·은폐된 사실을 파헤쳐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도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냈다. 군·경찰·국가정보원 등 해당 기관의 의면과 사건 당사자들의 비협조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로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조사 불능'으로 판정된 사건들은 이제 억울한 죽음으로 역사에 묻히게 된다.

위원회는 의문사 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조사권 강화가 없는 활동 시한 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소극 대응도 문제지만 조사권 강화를 놓고 정부 내에 이견이 많아 법 개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묻혀 있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명예 회복과 보상의 길을 트는 것이 위원회의 성과라면, 앞으로 과거 청산을 통해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은 국민 하나하나의 몫이라는 한상범 위원장의 말이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역사의 눈

조광 고려대 교수·한국사



죽은 이의 명예도 소중

역사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데 어울려 보려는 학문이다. 그러기에 지난날의 사건들이 오늘에도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날을 위해서도 이를 끄집어보게 마련이다. 또한 역사는 사람들을 모든 생각의 중심에 놓고, 그들의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그 죽음과 삶의 의미를 따져보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지난날과 진배없고, 사람들은 죽은 이의 명예까지도 산 사람과 마찬가지로 늘 중요시해 왔다.

조선왕조 후기의 역사만을 살펴보더라도, 자신의 신념이나 정치적 처신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지만, 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신원(伸寃)되어 명예를 회복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송시열은 1689년에 사약을 받았으나 1694년에는 신원되어 관직을 되찾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801년에 진행되었던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윤영일이 사형을 당했으나 죽은 지 40여년이 지나서 신원되었다.

신원위해 목숨버린 사례 많아

우리의 역사에서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목숨을 버렸던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서학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천주교 신앙을 지키고자 했다. 그 순교자 중 일부는 19세기 말엽 조선정부로부터 신원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의 가치는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사랑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위해 재해석되기에 이르렀다.

동학을 창도했던 최재우도 1884년에 순교했다. 그의 정신적 후예들은 그를 신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노력은 1871년에 '이필재의 난'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전쟁도 교조 최재우의 신원운동과 관계가 깊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던 사람들은 그 명예 회복을 통해 자신들의 삶과 믿음이 옳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처럼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죽어버린 과거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과거 지향적 행동이 아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려는 노력의 일부다. 그리고 이는 보람찬 미래를 열기 위한 결의일 수밖에 없다.

1975년 한국현대사의 한 쪽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 진행되고 있

었다. 유신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은 반대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고문과 사건조작을 일삼아 왔다. 우리가 살고 있던 대명천지 20세기 한국 땅에서 국도의 야만이 횡행했다. 그 야만은 우리 자신의 환상과 도피심리, 방관과 무관심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었다. 당시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254명이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들 가운데 8명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20시간 만에 처형되었다. 그들의 사형은 사법살인이요 국가폭력의 전형적 예가 되었다. 그들이 사형을 당한 직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던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판정은 너무나 늦

었다. 이미 사형당한 8명의 귀중한 생명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그 가족들이 당했던 고통의 양은 백두산보다 높게 쌓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고통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이 된다. 그 죽음의 고통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살리는 힘이 움틀 수 있고,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 교문 없는 사회를 이루려는 꿈이 영글어 가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계속돼야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정치적 행동이나 신념 때문에 죽은 이들의 신원을 위해 노력했다. 이제 오늘 우리 앞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고 고문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철저히 회복해 주고, 그 아픔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다. 이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인혁당의 사형수출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정신적 부채가 있다. 그들은 이를 늦게나마 기워 갚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명을 다졌버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우선 되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시한 없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 위원회는 아픈 과거의 정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는 오늘 우리 결의의 상징이다.

의문사규명위 법적활동 마감·해체

최종길교수 사망진상등 성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16일 1년9개월에 걸친 법적조사활동을 공식 마감하고 해체된다.

진상규명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83건의 의문사 사건을 접수,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와 허원근 일병 사건 등 배일에 가려져 있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녹화사업 및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등 의문사 배후로 지목된 실체를 밝혀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8면>

그러나 미약한 조사권한과 촉박한 조사시한 등으로 접수된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진상규명위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30건이 넘는 의문사 사건이 진상규명 불능판정을 받아 유가족들

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수감됐다가 1982년 출소한 15명 중 5명이 각종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생존자 중 일부도 고문으로 인한 척추장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윤해기자

사설

누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하는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발생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법적 제약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미 제출된 의문사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16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과거를 묻어두거나 과거 독재시대와 권위주의시대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들은 진실 은폐를 위한 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다. 최근 허원근 일병 타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증언자들이 진실 감추기에 나선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이는 독재정권 시절의 국민 길들이기가 얼마나 해독을 끼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새삼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조작된 사실을 진실로 믿어야 하는 정보통제사회의 도래를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제 우리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진실의 문에 들어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제 민주세력은 다시 이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불의의 하수인, 거짓의 공범자들이 정의와 진실을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온갖 탄압과 구속에도 꺾이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민주세력과 양심세력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역사적 진실을 요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새로운 투쟁 방도를 찾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 의원 25명은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입장을 밝힐 때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기한 연장” 16일 낮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연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조사 중단에 대한 항의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오종렬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의문사 30건 조사 불능

진상규명위 결정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기한이 끝난 16일 “지금까지 조사 대상 82건(기권 1건 제외) 중 19건만을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하고 33건에 대해 기각을, 30건에 대해 조사 불능을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더기로 조사 불능을 결정함에 따라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재야 지도자 장준하씨 추락사와 중앙대 총학생회장 이내창씨 사건, 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 사건 등 1970~80년대 발생한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들이 모두 진상규명 기회를 잃게 됐다.

한편 규명위는 이날 81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정배씨 사망사건 등 9건을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로 추가 인정했다.

규명위는 “삼청교육 대상자로 순화 교육을 받던 중 감호생 집단난동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진 전씨는 사망 전 구타 중단·귀가 조치 등 6개항을 요구하며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다”고 발표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의문사규명위 앞으로 어떻게 되나

조사활동 끝났지만 내년 3월까지 존속 법개정엔 조사재개 가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6일 1년9개월에 걸친 조사활동을 마감했다. 조사 활동은 마감됐지만 진상규명위는 내년 3월까지 존속하게 된다. 다음달 16일까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 3월16일까지 보고서 출간과 각종 권고 조치를 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상규명위는 조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조사 기한인 16일까지 법 개정은 무산됐지만,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많아 조사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16일 "국회의원 273명에게 보낸 법 개정 여부를 묻는 질의서에서 72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의원 29명이 포함돼 있어 법 개정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며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도 각 정당이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진상규명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기간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에서 전면적인 반대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의문사가 정치권의 비협조로 다시 어두운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시한연장과 조사 권한 강화를 담은 특별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답변서를 보내온 국회의원 외에도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이 70명 이상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멈추면 안된다'

/ 김세구기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의문사 진상조사 중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의원들, 의문사촉 '외면'

'기간 연장' 찬성 273명중 72명뿐 위원회선 '법개정' 국회에 의견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법적 조사 활동이 끝난 16일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이 연장되고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문사위는 계류중인 개정법안과 관련, 법사위가 의견 제출을 요구해오며 따라 이날 "조사권의 미약, 관계기관의 비협조, 조사기간 부족으로 의문사위 활동이 제약받았다"면서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을 법개정으로 그 진실을 규명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보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법 개정에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돼 법개정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개질의했으나 현역 국회의원 중 72명만 찬성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현역 국회의원 273명 전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회신을 한 72명은 전원이 개정에 찬성했

다"면서 "공개질의서를 회신하지 않으면 반대로 간주한다고 명시, 다른 의원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설명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정당별로 민주당 42명, 한나라당 29명, 자민련 1명이었다.

한편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는 의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기간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17일부터 1인 시위와 국회 앞 농성투쟁 등을 벌이고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후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독재정권 불법 규명 성과 진실 밝히는것 국민의 몫”

22개월간에 걸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16일로 끝났다. 이날 한상범 위원장(66·사진)은 “독재정권 시절 일어난 각종 의문사의 진실을 시간의 제약과 미약한 권한 때문에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관심이 모아질 때만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의문사 진상규명추진위원회 한상범위원장 ‘사법살인’ 상황 재해석 꼭 필요 정치권·관련기관등 비협조 유감

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의 제도와 관행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밝혀낸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법살인’이 자행되고 법치가 무시되던 당시 상황에 대한 재해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활동 기간이 2차례 연장됐음에도 1년10개월에 불과한 시간의 한계와 조사권한의 미약함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비협조적이었던 데.
“피진정기관이 위원회의 요청에 비협조적인 모습은 유감이었다. 국가기관은 이뿐만 바꾸려하지 말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고 시대에 부응하는 체질 변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기관들의 체질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시 작업을 게을리한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의문사위의 활동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독재정권 시절의 인적·물적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의 하나였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구세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갈등없는 사회는 없다. 위원회 활동중에 드러난 갈등도 우리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조사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국회의 법개정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위원회는 법대로 일단 조사활동을 중단하고 내년 3월까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보고 및 마무리에 충실하겠다. 그동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때는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부여돼 22개월간의 조사활동 동안 드러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공은 국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이 단순히 이벤트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다행히 허원근 일병 사건 등을 통해 국민들도 의문사의 진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의혹의 죽음은 민주주의 체계가 확고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의 관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다”
-지난 5개월간 위원장으로 느낀 소회는.
“지난 4월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남들은 안하려는 일을 왜 굳이 하려드냐’며 말렸지만 마지막까지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 각오대로 성실하게 일해왔다”
글 / 안홍욱·사진 / 김석구기자

세상만사



노동일
논설위원

의문사의 진실이 감추어지면

“감추어진 것은 밝혀지고 비밀은 세상에 알려지게 마련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내걸린 성경 구절이다. 개역한글판은 같은 누가복음 8장 17절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기록한다. 숨은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의 성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이 위원회의 사명감을 드러내려 한 것이기보다 오히려 한계를 절감하며 내건 말이라면 참으로 역설적이다.
의문사위는 2000년 10월17일 아랍사리 출범했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든 과정이었다. 권력기관의 완강한 조직보호 논리와 한시코 진실을 회피하는 관련자들 앞에서 진상규명 작업은 번번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나가던

우선은 진실이라는 말의 가치를 강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 일이다. 우리는 지금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혼돈이 극에 달한 상황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청문회장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불립없이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이 드러나고 매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떠나 없이 탈법과 불법을 범나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누구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우리 사회 분위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의문사 규명 작업이 흐지부지 끝나고 만 것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려할 일이다. 1996년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중대 인권침해법’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과거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알 권리’와 ‘국가의 기억 의무’를 중요하게 기술한다. 국민이 과거 인권 침해의 진실을 알아야 하고, 국가는 민중을 억압한 역사에 대해 기억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과거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유사한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쉽게 재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권력기관들이 언제 다시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점이다. 국정원 기무사 군검찰 경찰 등은 아직도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만약 이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도 미래의 행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내년 3월까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시간 연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차제에 유엔이 권고하듯 특정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단순히 의문사 당사자나 유족 등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감추어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믿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그 어떤 과제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인 것이다.

정보기관 직원이 비웃듯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일단 덮은 것은 절대로 밝힐 수 없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의문사에 대한 증거는 찾기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들의 진실된 증언만이 의문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셈이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이 이렇진대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처럼 한 때 의문사위에 퍼진 무력감을 깨뜨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내건 구절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2002년 9월16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말았다. 의문사위의 조사시한 연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시한을 넘긴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와 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존속하지만 조사활동은 중지하게 된다.
결국 정보기관 직원의 장담이 현실화된 것을 보며 ‘진실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반민특위 해체에 이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또 좌절됨으로써 우리가 치를 대가는 크다.

특별기고



박형규
목사

우리 겨레의 역사는 '억울한 죽음'들의 소리없는 외침이 애써 진실을 외면하는 시대의 양심(良心)을 일깨우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민족공동체의 양심적 대응이 없거나 이를 소홀히 했을 때 공동체는 존재(存在)의 이유를 상실하고 해체의 과정을 밟게 마련이다.

83건중 30건 조사도 못해

'국민의 정부' 5년의 임기중 민족사의 견지에서, 가장 핵심적 업적 하나를 뽑는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압둘했던 군부독재시대에 발생한 '억울한 죽음'들에 대한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냄으로써 민족의 양심이 되살아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얼마지 절반의 결실도 거두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구 요소요소에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세력들이 견재한 가운데 서둘러 입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빠진 힘없는 기구가 되고 말았다.

2000년 초에 제정되고 10월에 시행된 특별법에는 의문사를 발생시킨 국가기구(군, 정보기관, 경찰)에 대해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고, 출석요구에 불

억울한 죽음 묻을 수 없다

응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대응밖에 할 수 없게 돼 있다. 조사기간도 6개월로 한정하고 연장도 3개월 이내로 못박았다. 유능한 조사관이 혼신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법적 제약과 시간적 한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의문사위'는 16일로 조사활동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조사활동과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만 남기고 있다.

위원회가 접수한 83건의 의문사 조사 진정사업중에서 53건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고, 30건은 조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할 형편

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사건들중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장준하, 이낙창, 이철규, 박창수, 인혁당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의문사위'의 활동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붉은악마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4강 진출에 도취하는 오늘,의 세태에서도 양심, 진실, 정의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불의한 권력의 비호 아래 국가기관이 안보와 반공의 이름으로 저지른 천안공노할 야만적 살인행위는 '의문사위'의 종결과 함께 역사의 무덤에 묻히고 마는 것인가.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10년, 20년동안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해 탄원과 탄식의 삶을 살아온 의문사 가족들의 한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마는 것인가.

아니다. 양심, 진실,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 국가, 민족은 존재해서도 안되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 나라가 월드컵 우승국이 되고 세계 최고의 부와 힘을 가졌어도 양심과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면 지구촌에 존

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바로 '의문사위'의 좌절을 막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 믿는다.

시한연장 국회 나서라

우선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는 조속히 여야 합의하에 조사시한 연장을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이 적어도 특별검사 정도는 돼야 의문사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의문사위' 법의 개정을 위한 특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각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진실과 양심과 정의를 외면하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대중에게서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우리 속담에 바벨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도 있다.

'의문사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 쪽으로 국민의 마음은 쏠릴 것이다.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의문사 규명위 '미완의 마감'

출범2년 결산과 전망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의 조사시한이 16일 마감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이 규명위의 보고서 작성 시한인 내년 3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30건의 의문사가 미제사건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규명위는 16일 전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그동안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조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전체 83건 가운데 30건은 조사권한 미약과 시간부족, 사건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조사시한 마감에 즈음한 의견을 내고, "진정사건 대다수가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자료가 없거나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불투명한 사례가 많고, 진상규명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국가기관 등 사회 곳곳에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간 연장조와 조사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한에 쫓겨 30건 진상규명 못해
억울한 죽음 다시 역사속 묻힐 위기

한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자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청문회 개최 등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유가족 대책위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사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닷새동안 전체 국회의원 273명에게 의문사법 개정의 찬반의사를 묻은 결과 72명이 찬성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에는 한화갑 대표 등 민주당 의원 42명, 서청원 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29명, 자민련 송광호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하고, 의문사법 개정 문제를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자의 검증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규명위는 지금까지 모두 5613명의 참고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1526명은 조사관들이 방문조사를 벌였다.

현장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연인원 4383명의 조사관이 2164차례에 걸쳐 3248일간 출장을 다녀왔다고 규명위는 전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이동거리를 합하면 38만 4254km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77차례에 걸쳐 법의학 전문가에게 소견을 물었다. 규명위 관계자는 "국내 법의학자에게 38차례, 일본·미국·남아공 등 해외 법의학자 5명에게 39차례 소견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의문사 23개월 시한 종료 '억울한 죽음' 다시 미궁속으로

이쉬움 남단체 조사 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1년 6월 20일 육군 제5사단 삼청교육 감호대에서 경계병들의 사격으로 숨진 전정배(당시 30살)씨가 당시 삼청교육대의 불법성에 대해 집단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나 '의문사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당시 감호생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전씨는 부대 장교들의 짚은 구타에 대해 '행정적으로 처리하라'고 항의하면서 집단저항을 보이던 도중 이를 저지하던 경비병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3일

간 집중심의를 벌였던 위원회는 이날 법정 조사활동 종료시한을 맞아 한영현, 이윤성, 정성희사건 등 5공 시절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녹화사업'과 관련한 의문사에 대해 추가로 '인정'을 결정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의문사의 민주화 관련

성 여부에 대해 조사된 53건 가운데 김준배사건 등 19건을 '인정'했으며 허원근사건

81년 삼청교육대서 피격사망
전정배씨 의문사로 추가인정
접수83건중 30건 조사못끝내

등 33건은 '기각', 배중손사건은 '진정취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한된 조사 기한과 권한의 미약함으로 이날까지 83건의 의문사 가운데 30건(36.1%)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 그 수명을 다함으로써 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또 다시 '미제'로 남아 역사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장준하사건등 30건 결국 '규명불능'

의문사 23개월 시한 종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 온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의 조사활동이 16일 종료된 가운데, 장준하(張俊河·재야지도자) 이내창(李來昌·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사건 등 국면적 관심을 모은 주요 의문사 사건들이 결국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됐다.

장준하 사건은 최근 "동행자가 중앙정보부 정보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진술

의문사위 최종 결정 현황

총 접수 사건	83건
의문사 인정	19건
진상규명 불능	30건
기각	33건
진정취하	1건

"권한부족·비협조 한계" '인혁당' 장석구씨등 19건 의문사 밝혀낸건 성과

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됐으며 이내창 사건도 변사체가 발견된 거문도에 안기부 직원이 동행했다는 정황 증거는 나왔으나 직접 타살 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 외 박정수(朴正洙·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철규(李哲揆·조선대 교직원집위원회) 사건 등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타살의혹이 제기된 상당수 의문사가 관련 기관들의 협조 거부 등으로 타살 주체를 밝히지 못해 총 83건 중 30건이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그러나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전정배(田貞培)씨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수감돼 옥사한 장석구(張錫九)씨, 녹화사업 피해자인 이윤성씨 등을 추가로 밝혀내, 19건을 최종 의문사로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씨는 1981년 다른 감호생들과 함께 삼청교육의 불법성에 대해 집단 저항을 벌이는 과정에서 숨졌으며, 장씨는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수감돼 숨진 점 등이 밝혀져 의문사로 인정됐다.

한편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건들과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 등 33건은 기각판정을 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진상규명 불능 사건 중 상당수는 기간·권한부족, 관계기관의 비협조라는 위원회의 한계가 만들어낸 숙제"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여기서 멈출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 등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16일 ▲자료 제출 강제 권한 ▲입수·수색·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권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의 적용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16일 오전11시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원들이 의문사위의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의문사법 개정 국회의원 72명 찬성

시민단체 공개질의, 이회창 후보 무응답 사실상 반대의사

시민단체들이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를 실시한 결과, 72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선후보군인 이회창, 이인제, 정몽준 의원 등은 답변을 보내지 않아 사실상 법개정 반대의사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15일 의문사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실시한 결과, 민주당 42명, 한나라당 29명, 자민련 1명 등 72명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계승연대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때 의원들이 찬반의견을 보내지 않을 경우 반대의견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계승연대는 찬성의견을 보낸 7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경우 사실상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창복, 임종석, 김근태, 천정배 의원 등 개혁·소장과 의원들이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도 김원웅, 서상섭, 김홍신 의원 등 개혁 성향 의원들이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자민련은 송광호 의원만이 찬성했다.

반면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 의원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으며 이인제, 이한동, 정몽준 의원 등도 회신이 없어 사실상 법개정 반대의

사를 나타냈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현역 의원이 아닌 관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법개정 공청회에서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계승연대 관계자는 "의문사 조사 활동이 끝나는 오늘까지 국회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고 '기간연장'으로 생색이나 내려는 움직임밖에 없다"며 "조사권한 강화 없는 조사기간 연장은 거부한다"고 말했다. 계승연대는 조사권한 강화가 담긴 법개정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정당의 경우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전면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원회 가족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와 관련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에 한나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이회창 후보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자 19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영근 일병 아버지 허영춘(63)씨가 허탈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전경을 앞에서 있다. /이화정 기자 dle@laborw.com

“인권위마저 손놓으면...”

행정소송 진행등 이유
군의문사 조사에 미적

16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 조사활동이 종결된 가운데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 절규하고 있
다. 유가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냈으나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의
견'만을 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가족 엄명숙(50·대구시 수성
구 두산동)씨가 공군에 복무하던
아들 장승완(당시 22살) 상병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것은 1999년 4
월이다. 엄씨는 자식의 주검을 영
안실에 냉동보관하고 장례도 치
르지 않은 채 죽음의 진상을 규명
하려고 3년 동안 노력해 왔다. 그
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인권위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
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구두로
양해를 구해왔다.

또다른 군의문사 유가족 김기
순(54·충남 논산시)씨도 해군 중
위로 근무하다 98년 8월 탈영한
뒤 경북 김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아들 김태운(당시
24살)씨의 주검을 김천의료원에
냉동보관한 채 진상 규명에 나서
고 있다. 김씨는 국가인권위에 진
정을 냈지만 아직 이렇다할 통보
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도 역
시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국가인권위는 엄씨와 김씨 사안
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의문사 진상규명에 박수 지금이라도 활동 연장을

아들 둘을 모두 육군 현역으로 보
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이며 소시
민이다. 1980년대를 거치는 동안 슬
한 의문사에 대한 보도를 듣고 보면
서, 자식 걱정에 가슴 졸이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근래 그간의 의문
사에 대한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
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이
참담하게 떠오르면서도 한가닥 희망
을 보는 듯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이 의문사 관련 법 개정을 회피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시한
연장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은 분노를
넘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
는 충격이다. 수재의연금 모금도 중
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소
시민들의 집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상
봉도 중요하지만, 의문사 진상규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문제를 소
홀히 다루는가? 노동자, 농민, 학생,
교육담당자, 공무원, 사회단체는 모
두 힘을 합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
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시한 연장
이 이루어져 모든 의문사에 대한 진
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최보영/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亡者의 한 못 풀어 시름만...”

규명안된 '의문사' 유족 '눈물의 한가위'

아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규명하지 못한채 태풍 '루사'로 집까지 잃은 강릉의 의문사 유가족들이 추석을 앞두고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의문사위의 '진상규명 불능' 판결이 내려진 고 김성수씨의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본가는 폭우로 완전히 쓸려가 아버지 김종욱(66)씨와 어머니 전영희(65)씨는 강릉시에서 내준 컨테이너에서 이종의 시름을 달래고 있다. 김성수씨사건은 서울대 지리학과에 입학한 몇달뒤인 지난 86년 6월 부산 송도앞바다에서 시멘트 덩어리를 메단 변사체로 발견돼 '5공하 대표적 의문사' 사건으로 꼽혀왔다.



18년만에 아들이 군부대에서 타살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허영춘씨가 추석을 사흘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아들 원근씨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kr

아들의 죽음후 아버지는 강릉과 서울의 유가족협의회를 오가며 진상규명을 직업삼아 살아왔다. 이번 수해로 집이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아들 관련 각종 자료가 모두 유실된 것이 더 마음이 아프다. 김씨 가족의 딱한 사연을 들은 의문사위는 18일 전직원이 수해성금을 모아 조사관을 강릉으로 보내 전달했다.

의문사위 활동이 지난 16일 미완으로 끝나면서 유족들의 추석맞이

것으로 밝혀진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영춘씨도 이제야 명절다운 명절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영춘씨는 "원근이가 죽은 뒤 명절이나 제사에 전혀 신경쓰지 못했다"며 "이번 추석에는 그동안 못 모았던 형제들과 자식들이 다 모이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허씨는 그러나 "매년 추석날 유가족이 합동 차례를 지내는데 '진상규명 불능'이나 '기각' 판결을 받은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괜히 미안해진다"고 말했다.

수해까지 겹쳐 집 잃고 자료마저 유실

아들 주검사진 본 모친 충격으로 사망

진상 밝혀진 유족들은 "이제야 응어리 풀려"

에 회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망의 진상이 밝혀지거나 명예가 회복된 가족들은 "가슴에 맺혔던 큰 응어리가 풀렸다"며 홀가분해 하지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회마저 무산된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다.

1974년 인민혁명단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씨는 18일 "28년이나 걸렸지만 이제라도 남편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추석날 하씨와 도예중, 송상진, 여정남씨 등 인혁당 사건 관련자 4명이 안장된 경북 칠곡의 묘지를 찾을 계획이다. 18년만에 자살이 아니라 타살된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나 의문사위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박필호씨 가족에게는 가장 힘든 추석이 될 것 같다. 지난 6월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처참한 주검사진을 본 박씨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진 뒤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다.

역시 군에서 의문의 자살을 했지만 '진상규명 불능' 판결을 받은 최우혁씨의 아버지 봉규씨는 "아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밝혀 주겠다'고 또 약속할 수밖에..."라며 연신 담배를 피워물었다.

/오남석·노윤정기자
greentea@munhwa.co.kr

'억울한 죽음' 또 파문는가



"불법과 무도로 사람을 죽인 곳에서는 희망이 자라지 못한다. 그 죽임의 이유가 이상(理想)이라는 명목이든 명령이란 변명이든 간에..."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남미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살로몬 레르너 위원장의 말이다.

레르너 위원장이 이끄는 페루진실화해위원회는 우리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비슷하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페루사회주의 게릴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군간의 전투과정에서 학살당한 안데스산맥의 농민 등 3만7000여 명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그런 범죄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대다수 중산층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험하고도 조심스러운 작업을 맡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의문사 진실 규명 막는 '악의 세력' 누구인가

더욱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다가 당시의 게릴라 지도자나 군 지휘관들이 모두 조사를 기피하고 있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이 생각보다 진전이 더디지만 법보다 도덕의 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군사독재시절 국가공권력이 비호하고 은폐 조작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캐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눈앞에 둔 9월 초순, 한상범 위원장은 이렇게 개탄했다. "의문사 진실규명을 막는 '악의 세력'이 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거나 권력에 기생해 부와 권세를 누렸던 일부 기득권 층이 '악의 세력'으로 의문사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발언해 적지 않은 파문을 던졌다.

역시나 그가 우려했던 대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정치권의 의도적 무관심과 국가기관의 비협조로 엇그제(16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공식기구해체는 내년 3월이지만 국회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조사시한 연장을 끝내 외면해 더 이상 조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조사기간도 짧고 수사권도 없었지만 의문사 규명위의 성과는 적지 않았다. 특히 암울했던 유신치하인 1974년 23명이 구속되고 이 중 8명이 전격 처형당했던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고문조작' 됐다는 발표내용은 충격적이다. 30년 가까이 파문해 있던 진실이 의문사규명위의 활동으로 빛을 보게 됐으며 '사법실인'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1973년 간첩혐의로 중징에서 조사를 받다 숨겨 '의문사 1호'로 불려온 서울대 최종길 교수 자살사건의 진실을 캐낸 것도 마찬가지다. 자칫 간첩이나 빨갱이로 낙인 찍히거나 자살자라는 누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독재권력의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성과를 간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규명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시한에 쫓겨 30건의 억울한 죽음이 미제사건으로 다시 역사 속에 묻힐 위기에 처해있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의문사인 장준하 선생 추락사를 비롯해 이낙창 이철규 박창수 사건과 군 녹화사업 희생자, 독재정권 시대에 이렇다할 까닭 없이 자살로 처리된 수많은 의문사의 진상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쳐야 한다.

시한연장, 공소시효 없애 원혼 계속 달래야

이를 위해 국회는 다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이미 끝난 조사기간의 연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시한을 두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문사위에 참고인에 대한 통화내용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한 사람,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문사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역사의 진실을 캐는데 공소시효나 시한이 있을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할 때만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발전하는 법이다. 과거 청산은 이제 국민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مان의 시대를 접고 정의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두석 주필

의문사 그냥 둘 수 없다

422일에 걸친 유가족들의 국회와 농성은 새천년을 며칠 남겨 놓은 1999년 12월 말까지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들었다. 이 법률은 다음해 1월 공포됨으로써 의문의 죽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창한 21세기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로서, 과거 너무도 어둡고 살벌했던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저질러진 의문의 죽음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에는 커다란 장애를 내포하고 있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년 반 동안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한시적 기구라는 것과 조사 대상 및 업무의 제약성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접수된 진정사건과 직권으로 조사 결정된 사건 등 총 83건 중 44건이 종결되었지만, 39건이 아직도 조사 중에 있고 그의 접수조차도 못한 의문의 죽음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의문사위는 이미 공표한 최종길 교수 사건 이외에 최근에는 허원근 일병은 타살됐으며,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이제 지난 16일로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은 법적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과연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은 종료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혼돈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과거정신을 통한 정의로운 역사 세우기를 포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21세기의 비전을 언급하면서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한다면, 이 비풀어지고 거짓된 과거 역사를 끈 게 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은 여야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국회는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는커녕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정감사를 이유로 다음달 초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으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나머지 사건은 검찰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뒤를 못가리는 말이다. 다시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자신들은 오직 12월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을 갖겠다는 이야기인가.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고, 대권까지 얻고 싶다면 먼저 민심을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죽음, 그것도 의문의 죽음들을 의면한 채 대권에만 눈이 멀어있다면 우리 모두는 또다시 어두운 절망의 늪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정치인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발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초당적 자세를 가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의문사 사건 관련 피진정기관은 알다시피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 기무사령부 등 국가 권력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우리나라 정치사 발전에 새 획을 그어주길 간곡히 바란다. 그럼으로써 의문의 죽음을 당한 당사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가해 세력 모두가 인간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거듭 발견하여, 정의로운 역사 바로쓰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고



황필규

목사·KNCC 부장

허원근 사건 관련 보도

총기살해를 자살로 위장하다니

군에 입대한 젊은이가 술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숨졌음에도 이를 자살로 위장한 사실이 18년 만에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1984년 군 당국이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 일병은 술취한 상관인 쏜 엠 16총에 가슴을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입대한 젊은이를 군 간부가 죽여놓고 현장을 훼손한 데 이어 조직적으로 숨긴 사실은 온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유족들의 일관된 진실 규명 요구를 군 당국이 18년 동안 묵살과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이다. 사건이 일어난 7사단의 헌병대 수사는 물론이려니와 2군단 헌병대 수사와 육군 범죄수사단 재조사 등에서도 자살로 결론 내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것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건이 은폐·조작된 과정까지 정밀하게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위원회의 활동 시한(9월16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반면에 위원회에 접수된 83건의 사건 가운데 종결된 것은 24건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시간에 쫓기는 위원회의 활동에 권력 기관들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도 대우중공업 노동자의 '의문사'를 자살로 처리한 검사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거부당했다. 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은 벌써 세번째다. 녹화사업 의문사와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를 거부했고, 심지어 의문사위의 정보기관 실지조사도 비협조로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노력해온 사회단체들이 20일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기간 연장 등을 뼈대라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나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 허원근 일병의 억울한 죽음은 의문사 규명위의 활동 연장은 물론이려니와 조사권한 강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웅변해준다. 국회가 법 개정 에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

84년 자살발표 강제징집자 허원근씨

만취 상관이 총기살해 군간부들 조직적 은폐

의문사규명위 "내무반서 밖으로 옮기고 2발 더 쏘"

강제 징집당한 대학생 출신 사병이
술취한 중대 간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군부대가 조직적으로 자살로
조직한 사실이 18년 만에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4
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병영
안에서 총기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던
허원근(당시 22살·사진) 일병이 중대
선임하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규명위가 이 사건에 관련된 군 관계
자 등 200여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허 일병은 사건 당일 새벽 2~4시 중
대 간부 진급 축하 회식 술자리 심부
름을 하던 중 술잔주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만취한 선임하사가 쏜 총에 오
른쪽 가슴을 맞고 숨졌다.

사고 사실은 즉시 대대와 연대에 보
고됐으며, 대대 간부들은 중대장 등과
대책을 논의한 뒤, 사고현장을 깨끗이
치우고 오전 10~11시께 허 일병의 주
검을 유류창고 옆으로 옮겨 다시 주검
에 두 발의 총격을 가해 자살로 위장했
다. 이어 중대장은 "오전 10~11시 총
성을 듣고 창고로 가보니 허 일병이 숨
져 있었다"고 신고하는 등 군 간부들
이 조직적으로 사건조작에 나선 것이
로 드러났다고 규명위측은 설명했다.

당시 7사단 헌병대는 허 일병이 부
대 안에서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못이
겨 자신의 총기로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머리 등에 세 발의 총을 쏘아 자
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
사건은 그후 유족들의 진정에 따라 2



군단 헌병대, 육군범죄수사단, 국방부 사망사고 재조사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했으나 모두 자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타살이 자살로 위장되는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이 사건 조작·은폐의 지휘계통을 밝혀나가는 과정에 관련자들의 협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소시효(15년)가 지나, 허 일병을 숨지게 한 당시 선임 하사(제대)를 비롯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허 일병은 부산수산대 3학년 때인 83년 강제징집됐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발로뼀 18년 '집념의 부정'

아들 죽음 밝힌 허영춘씨 "스스로 진실 밝혔으면..."



"진실규명만 된다면 다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4년 군 복무 도중 숨진 아들 허원근씨의 사망 원인이 타살로 밝혀진 20일, 허씨의 아버지 허영춘(63·사진)씨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기자회견 장소에 직접 참석했다. 18년에 걸친 힘든 진상규명 여정이 성과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전남 진도의 평범한 농부였던 허씨는 아들의 사망 이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을 맡는 등 생계를 핑계치고 진상규명에 매달렸다. 청와대, 헌병대 등 각계에 청원서를 수십번 넣었

지만 결과는 그때마다 동일하게 자살로 결론이 났다.

허씨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보다는 솔직히 진상을 털어놓을 것을 바라고 있다. 허씨는 규명위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아들에게 면 처음 총을 쏘던 하사관에게 편지를 보내 "다 용서할테니, 진실만 규명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허씨는 이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면,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납골당에 보관했던 아들의 유해를 정식으로 매장하고 아들을 가슴에 묻을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훈 기자

"군부대 자살" 아들 의문사 18년 싸워 '타살' 밝혔다

軍 조직적 은폐 규명한 허영춘씨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 허영춘(許永春·62·사진)씨는 1984년 군 복무 도중 숨진 장남 원근(당시 22세)씨가 타살된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다.

의문사규명위는 군 부대에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원근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그가 타살됐고, 당시 군 간부들이 나서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84년 4월 2일 새벽 강원도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이던 원근(당시 일병)씨가 중대본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뒷바라지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하사관(현 부사관)이 우발적으로 쏜 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소시효(살인 15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문사규명위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데는 전남 진도의 촌로인 아버지 허씨의 피눈물나는 노력이 뒷받침됐다.

원근씨는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2년을 마친 83년 9월 "3년 후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며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허씨는 아들이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는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군 당국에서 전해들었다. 군 부대를 찾아가던 허씨는 "원근이



술 취한 하사관이 총격

2발 더 쏘 자살로 위장

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왼쪽 가슴·오른쪽 가슴·머리 등에 모두 세 발이나 총을 쏘는 군 당국의 설명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건 직후 허씨는 생계에서 손을 놓다시피 하고 청와대·국방부 등 각계에 진정서를 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 때마다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냈고 "백번·천번 탄원해도 소용없

다. 몸조심하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허씨는 88년 기독교회관에서 4백여일간 단식농성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법의학 책을 읽으면서 자살이라는 군 검찰의 주장에 맞서기도 했다.

"동일한 시간에 총을 쏘다면 모든 상처의 피 색깔이 똑같아야 하는데 왼쪽 가슴 상처와 나머지 상처의 피 색깔이 다르다"고 들이대니 군 당국자가 대답을 못하더군요."

결국 허씨의 진정을 접수한 의문사규명위는 당시 목격자들에게서 "중대 간부들이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을 물청소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부대원이 허일병의 시신을 창고로 옮긴 뒤 왼쪽 가슴과 머리에 추가로 총으로 쏘 자살로 위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허씨가 원하는 것은 처벌이나 배상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는 규명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아들을 총으로 쏜 것으로 지목된 하사관에게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용서한다. 다만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허씨는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했는데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다면 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느냐"며 "원근이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재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seajay@joongang.co.kr>

“죄 고백하면 용서할겁니다”

아들 억울한 죽음 18년만에 밝혀낸 허영춘씨

“(당시 하사관이) 원근이를 죽였다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겁니다.”

허원근(許元根·당시 21세) 일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18년 동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아버지 허영춘(許永春·63·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사진)씨는 20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허 일병의 죽음이 군 당국이 밝힌 것처럼 자살이 아니라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날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아버지 허씨의 피나는 노력이

청와대등 수없이 탄원 허사진상 규명위해 법의학 독학
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못해

있었다. 전남 진도에서 농사를 짓던 허씨는 84년 4월 2일 큰아들 원근씨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농사일을 돕던 원근이는 온화한 성격에 힘든 일도 잘 견뎌내던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자살할 아이가 아닙니다.”

더구나 머리와 가슴에 총을 세 발씩이나 쏜 자살했다는 사실을 허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허씨는 청와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12번씩이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후 허씨는 법의학으로 아들의 죽음을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독학으로 법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허씨는 법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9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 원하는 답변을 얻진 못했지만 “자살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방부에 재조사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또 이번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때 조사관들에게 법의학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허씨는 88년 유가족의 의문사진상규명 135일 농성에 참여한 이후 유가족 의문사지회장을 맡았다.

허씨는 현재 아들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해 놓고 있다. 가해자들이 진실을 인정할 때 아들을 땅에 묻을 생각이다.

한편 허원근 일병 사건의 경우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지긴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이 사건은 99년 4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현재로서는 ‘공권력에 의한 사망’과 ‘민주화 운동 관련’ 여부가 입증될 경우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손호림기자 arysong@donga.com

만취 하사관이 사병사살 軍서 18년간 자살로 은폐

술 취한 하사관(현 부사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대학생 출신 사병의 죽음이 군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로 자살로 처리된 사실이 18년 만에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84년 4월 2일 육군 제7사단 3연대 3중대에서 발생한 허원근(許元根·당시 21세·사진) 일병의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장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비관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발표와 달리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20일 발표했다.



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고 4월 30일 수사를 종결했다.

소속 중대장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강제 전역됐다. 그러나 허 일병을 살해한 하사관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재조사도 자살 결론=2군단 헌병대와 육군 범죄수사단은 같은 해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역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후 99년 민원 제기에 따라 국방부 사망사고 재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도중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조사가 중단됐으며 대신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장병 10여명은 위원회 조사에서 “허 일병에게 총을 쏜 것을 봤지만 간부들로부터 사건을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허 일병은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3학년 때인 83년 자원 입대했으며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許永春·63)씨는 현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허 일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 당시 하사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적은 있지만 허 일병을 살해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호림기자 arysong@donga.com

허원근씨 84년 내무반서 총맞아 시신 옮기고 총 2발 더 쏜 위장

의문사규명위 “군간부·사병등 10여명 사건조작”

위원회에 따르면 타살 현장에는 군 간부와 사병 등 10여명이 있었으며, 대대 간부들은 대책회의 끝에 현장을 물청소하고 시신에 총 2발을 더 쏜 뒤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개요와 은폐=위원회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2~4시 중대 간부 긴급축하 회식 도중 간부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뒷바라지하던 하사관 1명이 술에 취해 M16 소총을 들고 내무반에서 행패를 부리다 우발적으로 허 일병의 오른쪽 가슴에 1발을 쏜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오전 4~6시경 대대 간

부들에게 보고됐고 곧바로 연대에도 보고됐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대대 간부는 중대장들과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내무반을 물로 청소한 뒤 오전 10~11시경 허 일병의 시신을 부대 인근 폐유류 창고 주변으로 옮겨 머리와 왼쪽 가슴에 1발씩을 더 쏜 자살로 위장했다.

이후 중대 본부 요원들은 “총소리를 듣고 창고 근처로 가 보니 허 일병이 스스로 총을 쏜 숨져 있었다”고 헌병대에 신고했다.

사건 조사에 나선 7사단 헌병대는 허 일병이 소속 중대장의 가혹행위

“84년 술취한 상관 銃맞고 숨진 사병 軍서 自殺로 조직적 은폐”

의문사조 ‘허원근일병 사건’ 진상발표 “시신 옮긴뒤 두발 더좌 자살로 위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0일, 지난 84년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허원근(당시 22세·일병)씨가 실제로는 타살됐으며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GOP 철책근무를 하던 허씨는 84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부대 안 폐유류고 율타리 주변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위원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허씨가 지난 84년 4월 2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6~7명의 중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열린 진급 소대장 축하 술자리에서 뒷바라지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하사관(현재는 부사관으로 개칭)이 우발적으로 쓴 총



○허원근 일병

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숨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허씨가 숨지자 현장에 있던 간부들과 3~4명의 사병들이 내무반을 청소하고 오전 10시쯤 허씨의 시체를 내무반에서 30m 떨어진 폐유류고로 옮긴 뒤 다시 왼쪽 가슴과 머리를 총으로 쏘아 자살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물증은 없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1명 이상의 사병들로부터 확실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그러나 증언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만약 사실이 라면 군으로서의 침으로 부끄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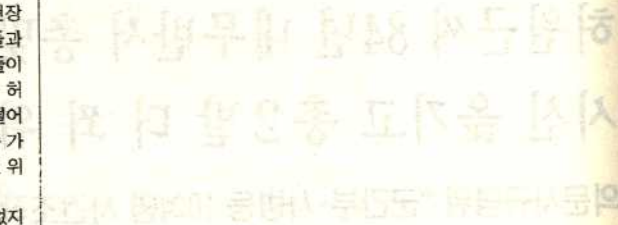
일”이라며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육군에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군단 헌병대는 “전령이었던 하 일병이 중대장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부대원들의 진술과 “사고 당일 오전 9~11시경

총성이 두 발 울렸다”는 당시 중대장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세 번이나 총을 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安容均기자



“18년간 아들 명예회복 위해 싸워”

아버지 허영춘씨

“내가 바라는 것은 처벌이나 배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코 자살하지 않았다는 진실 말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84년 군에서 자살했다는 아들 허원근 일병이 술취한 부대 부사관



○허영춘씨

로 법의학 책을 읽어가며 청와대, 헌병대 등에 청원서를 낸 것도 수십 번이었다. 다른 자식들이 ‘그만 포기하라’며 말

렸지만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지만 번번이 돌아온 답은 ‘자살’이었다. 군 헌병대로부터는 “탄원해도 소용없다. 몸 조심하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허씨는 “이제 아들을 쓴 것으로 밝혀진 당시 부사관에게 ‘자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 진상이 모두 밝혀지면 그동안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남골당에 보관하고 있는 아들의 화장 유해도 정식으로 매장할 것이라고 했다.

/安容均기자

단식·청와대청원등 계속
“처벌·배상이나 眞實원해”

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발표한 20일, 의문사위 사무실을 찾은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許永春·63·서울 동대문구)씨는 목이 잠겨 있었다.

아들이 자살하지 않았음을 밝혀내기 위해 몸부림친 18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길거리에서 자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단식 투쟁도 벌였다. 뜬나는 대

사설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허원근(당시 22세)일병은 1984년 4월 2일 새벽 중동부진선 철책선 아래의 한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우발적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18년 간 그의 죽음을 ‘중대장의 학대를 비판한 총기 자살’로 일관되게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충격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일병은 중대본부의 소대장 진급 회식 자리에서 한 하사관이 우발적으로 쓴 총알에 맞아 숨졌다. 현장에 10여명이 있었지만 중대와 대대급 간부들의 대책논의 결과 허일병의 시신은 폐유류고로 옮겨져 다시 두발의 총알 세례를 더 받고 자살로 위장됐다. 집단적 은폐 기도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는 해도 위원회가 1백여명의 관련자를 조사했고, 고인이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른바 특이사항의 강제징집 대상자가 아닌 일반 병역 의무자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군부의 조직적인 은폐 기도 사건일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군 당국이 사고 직후는 물론 1999년까지 고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여러 차례 벌였음에도 결론이 어떻게 해서 최초의 관정 그대로였는지에 대해 국방부의 진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복무 중 사고사를 당한 병사들과 유족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군 당국이 정확한 사인 규명과 적의한 조치를 한다면 적어도 군에 대한 신뢰는 유지된다. 그러나 사고사의 원인을 위장·은폐함으로써 고인의 명예와 인격을 말할 수 없이 훼손하고 유족의 분노를 더 한층 폭발시킨 허일병의 경우와 같은 사건은 군에 대한 신뢰 실추는 물론 병사들과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악재다.

따라서 군 당국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재발방지책도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 전선을 지키던 한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이 그나마 유의미한 죽음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 죽은 젊은 병사의 冤魂

2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4년 4월 2일 발생한 허원근 육군일병의 사망사건과 관련, 조사결과 중대장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비관자살이 아니라 만취 하사관에 의한 타살사건이라고 발표했다. 또 위원회에 따르면 타살현장에 중대 간부와 사병 10여 명이 있었고 대대 간부의 대책회의 끝에 시신에 총 2발을 더 쏜 뒤 자살로 위장했다고 한다.

국방부에 의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만일 위원회 발표가 100%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의 한 파편을 떠올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살을 자살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일부 군인들의 지독한 오만과, 위장을 목적으로 죽은 전우에게 총 2발을 더 쏘았다는 사실은 믿기조차 싫다. 또 분명 현장

을 보았을 10여명의 '눈'들이 18년 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는 대목에 할 말을 잃는다. 지난 10년간은 탈(脫)군사문화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사건은 최소한의 '시민적 용기'만 있었더라도 진작에 밝혀질 수 있었던 구조를 갖고 있다.

국방부가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철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일부 국민들이 병영 생활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런 유형의 사건이 국민에게 심어온 인상과 무관치 않다. 국방부의 재조사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불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조사 과정에 군(軍) 이외의 당국자들의 참여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투명한 조사만이 사건 관련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살 사실이라면 軍의 수치”

• ‘허원근씨 사망’ 軍당국 반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허원근씨 타살 발표와 관련, 군 당국은 20일 “아직까지 규명위의 세부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접수하는 대로 참고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육군 준장)은 이날 “만약에 규명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군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사실 확인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헌병대와 육군 범죄수사단의 사건 발생

세부자료 받는데로 철저조사 99년 재조사 ‘은폐’여부도 규명

당시 수사과정은 물론 1999년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 사고 재조사위원회’의 재조사 과정도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혐의가 있는데도 사실이 덮여졌다면 이에 따른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위원회가 거론한 당시 살해 용의자는 이미 전역했고 지휘계선에 있던 몇명이 아직 군에 남아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위원회의 최종 발표후 관련자들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아들 억울한 죽음 밝히려 뉘 ‘父情의 세월’ “18년간 장례도 안치렀어요”

• 진상규명 이뤄낸 아버지 허영춘씨 수십번 탄원서 허사... 軍선 “몸조심하라” 생계 팽개치고 독학으로 법의학 공부까지



18년 만에 자살이 아닌 타살로 밝혀진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

간신이 두번쯤 변할 세월이었다. 18년 세월 동안 ‘중대장의 확대군 생활에 희의를 느껴 자살했다’는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는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면서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뛰었다. 아들의 죽음이 사실대로 밝혀진 다음에나 장례를 치르겠다고 유골을 아직까지 땅에 묻지도 않은 아버지였다.

20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현상범)가 허원근 일병(당시 22세)이 1984년 소속 부대의 한 하사관에 의해 타살됐다고 밝히는 순간 발표 현장의 허영춘씨(63·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다 태워버렸는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의문사위의 발표가 끝난 뒤 허씨는 기자들에게 “이달초 아들을 죽인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원근이를 죽였다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의 농부인 허씨에게 큰 아들 원근씨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84년 4월 2일 낮. 원근씨가 숨진 당일이었다. 허씨는 아들이 머리와 가슴에 총을 3발씩이나 쏘자 살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착한 성격에다 초등학교 때부터 군말없이 농사일을 도울 만큼 힘든 일도 잘 견뎌내던 씩씩한 아들이었다.

허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자살할 아기가 아니다”는 확신을 갖고 아들의 사체를 인계받지 않았다. 아들의 한을 가슴에 묻은 채 청와대와 국회 등을 찾아다녔다. 곳곳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군 헌병대로부터는 “백번 천번 탄원해도 소용이 없다”며 “몸조심하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마지막

으로 법의학까지 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 재조사에 나섰으나 무위로 끝났다.

그가 마지막 기대를 안고 의문사진상조사위에 진정된 것이 2000년 12월 28일. 의문사진상조사위에서 아들이 근무한 부대의 관계자 200여명을 찾아다니는 때마다 같이 뛰다시피 했다.

허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처벌이나 배상을 원하기보다는 ‘원근이를 죽였다’는 사실만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면제 받는 상황에서 힘없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다면 누가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느냐”며 “모든 군 의문사의 진상을 밝힐 때까지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씨는 그러나 아직까지 아들의 유골을 묻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고 나서야 그동안 경기 마석 모란공원 납골당에 보관한 아들의 유골은 제정을 위한 422일 농성장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어김없이 울려나왔다. 아들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독학

기대를 안고 찾았던 언론도 반응이 없지는 마찬가지였다.

외로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토록 착한 아들이 눈을 부릅뜬 채 한을 풀어달라고 등을 때리는 듯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시대가 만든 투사가 됐다. 88년 유가족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125일 농성에 참석한 뒤 유가족의 의문사지회장을 맡았다. 98년부터 진행된 유가족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422일 농성장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어김없이 울려나왔다. 아들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독학

軍 84년 자살발표 허원근일병 상관이 총기살해 조직적 은폐

타살목적 중대간부등 10여명 조작가담 사체 옮기고 총2방 더 쏘...의문사조 밝혀

군이 자살했다고 발표한 대학생 출신 사병의 죽음이 사고발생 18년 만에 타살로 밝혀졌다. 특히 사건 현장을 중대 간부와 사병 등 10여명이 목격했으나 대대급 간부들에 의해 자살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1984년 4월2일 육군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서 발생한 허원근 일병(당시 22세·사진)의 사망 사건에 대

해 "군 수사당국이 '중대장의 허대로 군복무에 염증을 느끼고 자살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허일병은 타살됐다"고 발표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허일병은 부산 수산대(현 부경대) 2학년을 마치고 83년 9월 자원입대, 첫 휴가를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인 2일 오전 2~4시 중대 간부진급 축하회식 도중 간부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술에 취한 한 하사관이 행



패를 부리다 M16 소총으로 내무반 안에 있던 허일병의 오른쪽 가슴에 1발을 쏘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또 이 사고가 발생 직후 대대를 거쳐 연대까지 보고했으며 대대 간부들이 현장을 방문한 뒤인 이날 오전 10~11시쯤 허일병의 사체가 폐유류 창고 주변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누군가 허일병의 사체 왼쪽 가슴과 머리에 소총을 1발씩 더 발사해 자살로 위장

했다는 것이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이다.

의문사위 김준근 제1상임위원은 "군이 물청소로 현장을 훼손하고 병사들의 입을 막는 등 사고를 철저히 조작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위원은 또 "일부 목격자들로부터 '허일병이 모 하사관에게 타살됐다'는 증언을 받아냈지만 사체를 누가 창고 주변으로 옮기고 누가 사체에 총을 2발이나 더 쏘았는지를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은 이어 "군의 발표대로 허일병이 M16 소총 3발을 쏘서 자살했다면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어야 하는데 피가 없었다는 점은 허일병이 죽은 뒤에 옮겨졌다는 걸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김위원은 "이 사건을 조작은폐하는 데 대대급 간부들이 개입했다는 증언을 받았으며 현재 연대급 이상 간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배정수기자**

“의문사 허원근씨 軍간부 타살 은폐”

진상규명위원회 확인

“만취 하사관이 총 쏘 보안사도 개입 정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84년 군 복무중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허원근씨(당시 22세) 사망사건과 관련,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허씨의 사인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며 군 간부들이 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보안사(현 기무사)가 사건 은폐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등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보안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1984년 4월2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당시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소속이던 허씨가 중대내 소대장의 진급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중대본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뒷바라지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하사관이 우발적으로 쏜 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허씨가 숨지자 군 간부는 오전 10시쯤 허씨를 본부에서 30m 떨어진 폐유류고로 옮긴 뒤 다시 왼쪽 가슴과 머리를 총으로 쏘아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당시 군 현병대는 허씨가 중대장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윤해기자 justice@kmib.co.kr

軍 84년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일병

“상관이 총기 살해뒤 은폐”

의문사규명위 “우발적 사고... 총2발 더 쏘 위장”

허씨 아버지 “18년간 장례 안치러... 軍선 협박도”

군 부대에서 사병이 술에 취한 간부의 총에 맞아 숨졌으나 군 간부들이 자살로 조작, 은폐한 사실이 18년 만에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0일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허원근(許元根·당시 22세·부산수산대 휴학) 일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허 일병은 84년 4월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중대본부 막사에서 허사관이 우발적으로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사건 경위와 조사 결과 규명위는 “당시 중대장 전령 겸 무전병이었던 허 일병이 소대장 진급 축하 술자리에서 심부름을 하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허사관이 쏜 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다.

규명위는 허 일병이 술자 문책을

우러한 중대장 김석홍 대위 등이 사체를 막사에서 50m쯤 떨어진 기류창고로 옮긴 뒤 왼쪽 가슴과 머리에 2발을 더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고 상급 부대에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중대 간부들은 군무지인 GOP 초소를 이탈해 자정 무렵부터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관할 2군단 헌병대는 “중대장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허 일병이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규명위는 2000년 12월 진정을 받은 뒤 허 일병과 함께 근무했던 중대 간부와 사병, 상급부대 관계자 등 200여명을 조사한 끝에 현장을 목격한 10여명으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규명위는 사건을 은폐하는



허원근씨

데 개입한 상관들과 추가로 2발을 쏜 중대 간부들을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18년만에 타살 밝힌 아버지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아버지 허영춘(許永春·63)씨의 18년에 걸친 피눈물나는 노력이 있었다. 허씨는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는 군단국의 설명이 믿을 수 없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3발이나 총을 쏘았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의 시신을 확인한 뒤 타살을 확신한 허씨는 육군 범죄수사단과 국방부 등에 진정서를 냈으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무리 탄원해도 소용없으니 음조심하라.”는 협박만 들었다.

전남 진도의 농부였던 허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을 맡아 단식농성도 하

고 법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하며 써왔다. 그는 지금껏 아들의 유골을 묻지도 못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허씨가 원하는 것은 처벌이나 배상보다는 진실이다. 그래서 이달 초 아들을 죽인 당사자로 추정되는 당시 허사관에게 “원근이를 죽였다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국방부 일장 군 당국은 공소시효(15년)는 끝났지만 세부 자료를 받는 대로 사실확인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해(육군 중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대단히 부끄럽고,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면서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병대와 육군 범죄수사단의 당시 수사과정은 물론 99년 국방부의 재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있는 데도 사실이 덮여졌다면 이에 따른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 오석영기자 sylee@kdaily.com

자살로 둔갑한 군 살해사건

술취한 상사로부터 총을 맞고 숨진 사병을 군 부대가 자살(自殺)로 둔갑시킨 사실이 18년만에 밝혀졌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의문사’가 병영에서 발생했고 교묘히 은폐돼 온 것이다. 자살극을 꾸민 현장에는 중대장과 대대간부, 그리고 동료 사병 10여명도 함께 있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집단 최면이라도 걸렸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조직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 우리 모두의 수치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동안 청와대와 군 당국 등에 탄원서를 내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숨진 사병의 아버지는 정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전해듣고 아들에게 총을 쏜 당시 허사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만 고백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끄럽고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전제,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대응이다. 우선 가해자들로부터 진실을 규명해내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물청소하고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총을 쏘자살로 위장하는 등의 ‘조직적 은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의 은폐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이 마음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다.

'근무지 이탈 술판' 숨기려 장교·하사관이 자살 조작

하사관이 '안주 부실' 이유 허일병 사살 국방부 "공소시효 지났어도 철저히 재조사"

군당국이 10여명이 목격한 상태에
서 피살당한 허일병 사건을 자살
로 조작한 것은 해당부대 장교와 하
사관(현 부사관)들의 무단 근무지 이
탈과 술파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였음이 의문사규명위 조사결과 21일

"억울한 죽음 아직 많다"

부친 허영춘씨

18년추적 '진실' 밝혀내 "軍개혁에 여성 바질터"



모두가 나서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 아들은 전제 의문사중 일부에 불과하다. 목에다 총을 5발이나 쏘고 자살한 것으로 처리된 사람도 있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죽음들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야 마석 모란공원 납골당에 봉안된 아들을 땅에 묻을 수 있게됐다"면서 의문사위 권한 강화와 조사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진실을 추적하는 와중에 온갖 협박을 당했으며, 법의학을 독학하기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오남석기자

"군 개혁운동에 '여성'을 바질터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아들 허원근 일병의 죽음이 18년 만에 자살이 아니라 상관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아버지 영춘(62·사진)씨는 21일 "힘 없는 집 아들은 군대에 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다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인 그는 "군 개혁은

밝혀졌다.
모 하사관이 허일병을 소총으로 쏜
죽인 직접적인 이유도 술파티 도중
허일병이 마련한 라면 등 안주가 부
실하다는 장교의 질책 때문이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본보 20일자 31면 보도>

의문사위에 따르면 사건당일인 1984년 4월 2일 새벽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서는 휴전선 야간 경계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중대 소속 장교와 하사관 전원이 중대본부에 모였다. 술자리가 거나해지자 김모 중대장이 "라면이 맛이 없다"며 하사관을 질책했고, 문제의 이 하사관은 M16 소총을 들고 허일병을 구타하려다 총이 발사됐다.

이후 근무지 이탈과 술 파티를 은폐하기 위해 대대급 간부들이 개입, 허일병이 낮시간에 자살한 것으로 처리됐다. 허일병 사체는 폐유류 창고로 옮겨졌고, 오전 10-11시쯤 다른 사병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사체에 2발의 총질이 더해졌다.

군 당국은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 피 한방울 남아있지 않고, 허일병 몸에 난 3발의 총알자국과 달리 총성은 2발밖에 안울렸음에도 자살로 결론내렸다. 한편 국방부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철저히 재조사하겠다"며 "1984년 헌병대와 육군 범죄수사단의 수사는 물론, 99년 국방부 재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 응분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軍 84년 자살발표한 대학생 허원근씨 "상관이 총기살해 조직적 은폐"

내무반서 M16소총으로 가슴 쏘 사체 옮기고 총 2발 더 쏘 위장 현장목격 10여명도 조작 가담



와 육군 범죄수사단 재조사, 99년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재조사 위원회 조사 등에서 군은 역시 자살로 결론내렸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장병 10여명은 의문사위 조사에서 "진상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대대급 간부들의 사건 은폐 개입은 확인됐지만, 연

의문사규명위 밝혀 파문

군부대에서 술취한 간부의 화풀이성 총질에 맞아 숨진 대학생 출신 사병의 죽음을 군 부대가 자살로 조작한 사실이 18년만에 밝혀졌다. 특히 타살현장을 군 간부와 사병등 10여명이 목격했음에도 대대급 간부들이 자살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3연대 3중대에서 발생한 허일병(당시 22세·사진)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장의 학대를 비관한 총기자살"이란 군당국 발표와 달리 허일병은 타살됐으며, 군이 현장을 훼손하고 병사들의 입을 막는 등 철저히 조작·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사건당일 오전 2-4시 중대간부 진급 축하 회식도중 간부들 간에 말다툼이 났으며, 술취한 간부 한명이 M16 소총을 들고 내무반에서 행패를 부리다 허일병의 오른쪽 가슴에 1발을 쏘 숨지게 했다. 오전 4-6시 이 사실은 대대 간부들에게 전달됐고, 곧이어 연대에도 보고됐다. 대대 간부들은 현장을 방문, 중대장과 대화를 논의했으며 오전 10-11시 허일병 사체를 폐유류 창고로 옮긴 뒤 왼쪽 가슴과 머리에 1발씩 더 쏘 자살로 위장했다. 중대장은 이어 '오전 10-11시 총성을 듣고 창고로 가보니 허일병이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

문화만평

이재용
lijy@munkwa.co.kr



社說

全-盧씨의 의문사 규명 비협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도 협력을 외면했다.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와 국정원까지 동행 거부 또는 방문조사 반대로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상규명위가 다루는 의문사는 모두 83건이다.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전-노 두 사람의 군부집권 때 발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두 사람은 5공 시절 강제징집 운동권 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마디 이유 제시도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진상규명위는 두 사람이 자진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동행명령장이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동행명령에

불복해도 과태료 부과 이상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진상규명위를 서둘러 발족시키면서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상규명위 활동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위원회 활동도 내달 16일이면 끝난다. 조사를 종결한 건수는 24건에 불과하다. 59건은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종결한 24건 중에도 보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협조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도 꼭 출석조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전직 대통령을 방문해 진술을 들어야 한다. 현직 검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조사를 포기할 것인가. 의문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경직된 자세를 풀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軍이 84년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일병 간부가 총기살해 조직적 은폐

의문사족 "만취하사관이 쓴총에 숨겨" 내무반서 사체 옮겨 2발 더 쏘아 위장 현장목격 10여명도 진상증언 회피

군부대 내에서 술 취한 간부의 총에 맞아 숨진 사병의 죽음을 군부대가 자살로 조작한 사실이 18년만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부대 내에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허원근 일병 의문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허 일병이 군 당국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타살했으며,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1984년 4월 2일 오전 2~4시 당시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화기소 대 소속이던 허원근 일병(당시

22세)이 소대장의 진급 축하연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하사관이 우발적으로 쏜 M16 소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시 허 일병의 사망은 오전 4~6시 대대 간부들에게 전달되고 곧이어 연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을 방문한 대대 간부들이 중대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한 끝에 사건을 은폐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내무반의 혈흔을 물청소로 지운 이후 오전 10시쯤 허 일병의 사체를 본부에서 30m 떨어진 폐유류고로 옮긴 뒤 다시 왼쪽 가슴과 머



◇故 허원근일병

리를 총으로 쏘아 자살로 위장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당시 중대장은 "오전 10~11시 총성을 듣고 창고로 가보니 허 일병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7사단 헌병대는 허 일병이 중대장의 과격한 성격과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는 등 군생활에 적응을 못한 나머지 휴가를 앞두고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허원근씨 의문사'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3발이나 총을 쏘았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의 의혹 제기

에 따라 84년 육본 범죄수사단, 96년 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98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의해 진상조사 움직임이 있었지만 무성

한 수사과-조사 중단으로 번번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대급 간부들의 사건은 개입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서도 "현장에 있었던 10여명의 목격자들이 '진상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 보강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산 수산대 3학년 재학중이던 83년 강제징집된 허 일병이 타살된 것과 관련해 누가 두 발의 총알을 더 쏘는지, 사건 은폐를 위해 상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총기살해로 밝혀짐에 따라 조만간 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참고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 등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아들 他殺 인정하면 모두 용서"

진상규명 18년노력 결실- 허일병 아버지 문답

"자살만 아닌 게 밝혀진다면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1984년 군 당국에 의해 '중대장의 학대를 비판한 총기자살'로 발표된 허원근 일병의 사망원인이 군 하사관에 의한 타살로 밝혀진 20일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3·사진)씨는 아들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1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이날 브리핑에 직접 참석한 허씨는 "평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곤 했던 아들이 나약하게 자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며 군 당국

으로부터 아들의 자살 발표를 전 해들은 뒤부터 18년에 걸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전남 진도의 평범한 농부였던 허씨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을 맡는 등 아들의 죽음 이후 생계를 꾸려가고 진상규명에 매달렸다.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등 각계에 청원서를 수십번 넣었지만 결과는 그때마다 동일하게 자살로 결론이 났고 군 헌병대로부터는 "백번 천번 탄원해도 소용없다. 좀 조심하라"는 소리까지 들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허씨는 포기하지 않고 단식 농성에 참여했고,

법의학적을 읽는 등 노력을 계속해 아들의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허씨는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나 배상을 원하기보다는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아들에게 맨 처음 총을 쏘던 하사관에게 편지를 보내 "아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한다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나라를 위해 군에 갔는데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다면 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느냐"며 "앞으로도 내 아들의 죽음뿐 아니라 전체



군 의문사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그동안 경기 마석 모란공원 남쪽 당에 보관했던 아들의 화장한 유해를 정식으로 매장하고 아들을 가슴에 묻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1984년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 일병 술취한 상관이 총기살해 술취한 상관이 총기살해

중대간부들, 사체 옮겨 두발 더 쏘아 자살조작

의문사규명위 밝혀



만에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0일 1984년 4월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중대본부에서 허원근(許元根·당시 22세·사진·부산수산대 휴학) 일병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간부가 우발적으로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대 간부 행패 부리다 총격 허씨의 목숨을 앗아간 당시 술자리는 상식적으로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자리였다. 84년 4월 2일 0시경 간부와 사병 10여명은 GOP(관측소) 근무지를 이탈해 중위로 진급한 간부의 죽

파티를 열었다. 중대장 전령을 받고 있던 허 일병은 이날 연주 준비를 담당했다. 그러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간부 중 한 명이 행정반으로 뛰쳐나와 행패를 부리던 중 중대장실 옆에 대기하고 있던 허 일병을 발견, 갑자기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M16소총을 때 들어 발사했다. 총알은 허 일병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 허 일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목격자들은 의문사위에서 "허씨가 굶린 라면이 맛이 없다"는 것이 간부가 총격을 가한 이유라고 진술했다.

자살 위장위해 시체에 총격 기해 허 일병이 숨지자 중대 간부들은 대책을 논의한 끝에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일단 연대와 대대에 사인을 자살 중대 간부 행패 부리다 총격 허씨의 목숨을 앗아간 당시 술자리는 상식적으로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자리였다. 84년 4월 2일 0시경 간부와 사병 10여명은 GOP(관측소) 근무지를 이탈해 중위로 진급한 간부의 죽

의문사위는 이에 대해 "2발의 총성은 외부에서 자살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제스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대장은 이 시간에 예정이 없던 순찰을 들며 총성 2발을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중대장이 99년 사망해 현장 조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시신을 옮겨야 총을 쏜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군 당국 조사에서도 자살 결론 84년 헌병대 수사, 같은 해 육군 범죄수사단의 재조사 과정은 '자살'의 거듭된 확인에 불과했다. 중대장만 현장관리 등을 이유로 전역



조지 됐을 뿐, 실제 허 일병에게 총을 쏜 간부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9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전달한 재조사 권고안 또한 국방부에 의해 묵살됐다.

위원회는 "대대장 연대장 보고 후, 군 내부의 어느 선까지 은폐에 가담했는지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이지만 사망원인에 피도 없을 정도로 영성하게 조작된 사건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군 조사는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군 간부들의 사건은 개입은 어느정도 확인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10여명의 목격자 등 관련자들이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 보강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의문사특별법 개정에 도움 됐으면..."

허원근일병 부친 험악어 아들유골 18년째 보관

"자살만 아니라고 해달라 했다나, '이래도 자살, 저래도 자살'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일 타살로 드러난 허원근씨의 아버지 허영춘(許永春·62·전 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씨는 오랜 한을 애써 삭였다. 땅에 묻어버리던 혹시 마음에서도 묻혀질까 유골을 그대로 보관한지 18년. 아들의 죽음은 차츰 다른 억울한 죽음도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1988년 유가족의 의문사 진상규명 135일 농성에 참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다음 달 16일 활동이 끝나 는 의문사위의 활동연장과 관련

강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그는 타살 발표에 대한 첫 소감도 "아들의 죽음이 의문사 특별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허씨는 얼마 전 위원회에서 일러준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죄를 물어려는 게 아니다. 군이라는 권력조직의 잘못이다. 군에 아들을 보낸 힘없는 서민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진희기자

의문사 자살판정 타살로 확인

의문사진상규명위, 84년 허원근사건 조작된 것 군수사기관 오히려 부친 협박하며 사건 은폐

군 헌병대와 육군 범죄수사단의 조사결과 군대 상과의 흑사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처리된 한 사병의 죽음이 술취한 간부의 우발적 총격에 의한 타살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0일 "허원근 사건 조사 중간 발표 자리에서 지난 84년 4월2일 소속 중대장의 이상 성격에 의해 허원근이 흑사를 비관, M16 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는 당시 헌병대의 조사는 조작·은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이날 "허원근 당시 중대 간부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가진 술자리에서 시중을 들

다 간부들끼리 생긴 말다툼에서 격분한 한 간부가 중대장실 앞에 있던 허원근에게 다짜고짜 폭행을 하다 허원근이 이를 막자 우발적으로 방아쇠를 당겨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의문사규명위는 그러나 사고 부대 중대장은 상급 부대에 자살로 보고하고 이후 유족인 부친 허영춘씨가 군 당국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기관은 오히려 "백 번 천 번 탄원해도 소용없다. 몸 조심해라. 생명이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협박까지 하며 자살사건으로 은폐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성의 없는 수사

와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된 군의 재조사 과정은 관련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아왔다"며 "사건 현장을 목격한 장교와 사병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타살로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군 당국과 관련자들은 지금까지의 사건 은폐에만 급급한 태도를 벗어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진상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허원근의 사인이 은폐·조작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이날 "이번 발표로 인권사각지대인 군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헌병대의 은폐조작 경위와 구조, 이후 범죄수사단과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 실체까지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용 기자 ysy@laborw.com

Military Found to Have Conducted Massive Cover-Up on 1984 Death

By Seo Soo-min
Staff Reporter

The military's systematic efforts to misrepresent the fatal shooting of a soldier by a drunken officer 18 years ago have been revealed.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yesterday said Pvt. Ho Won-kun, a 22-year-old stationed near the Demilitarized Zone at the time, was killed during a drunken brawl on April 2, 1984.

The military at the time announced Ho's death a suicide, obstructed evidence and forced dozens of witnesses to keep silent, the commission's tentative report found.

"The cover-up effort was systematic, under the direction of battalion-level officers," said Kim Hak-sun, one of the investigators.

Eighteen years of pleas by the Ho family and the presidential commission's interview of some 200 witnesses since last year led to the shocking revelations.

According to the commission, a quarrel occurred during a party in the barracks of Ho's unit, belonging to the 3rd regiment of the 7th Army Division, in Kangwon



Ho Won-kun

Province on the early morning of April 2.

In a fit of anger, one of the drunken officers fired an M-16 at Ho. The fatal shot went through the right part of his chest.

Upon hearing of the accident, the company commanders ordered Ho's body be moved to a waste oil storage facility, firing two more shots in the head and left chest to make it seem like suicide.

Ho's family and human rights groups have strongly objected to the authorities' claims, questioning how he could have shot himself three times when one would have sufficed in killing him instantly.

Ho was a junior at Pusan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when he entered the army in 1983. His first leave was scheduled for the day after the incident.

After his son's untimely death, father Ho Yong-chun had become a leader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calling for truth and justice

in cases of suspicious deaths. "I recently wrote a letter to the officer who fired the shot at my son, saying I will forgive if he admits that my son didn't commit suicide," he said. "No other family should go through what we went through."

He and other parents of men and women who died mysteriously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s staged a 422-day sit-in protest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1998-1999.

Such pressure led to the legislation of a special law on the issue. As a result,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was set up in 2000.

The commission's term of operations will expire on Sept. 16, despite plea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group for an extension.

"Many of the soldiers who witnessed Ho's death are still unable to tell the truth due to the military chain of command," said the report.

It called for the military's "active cooperation" on the issue.

As recently as March 2000, the Defense Ministry denied the allegations of cover-up.

ssm@koreatimes.co.kr

<연합시론> 허 일병의 억울한 죽음과 집단은폐

(서울=연합뉴스) 허원근 육군 일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20일 발표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84년 4월2일 발생한 육군 모부대 소속 허 일병의 사망사건이 당시 군당국의 발표대로 '상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비관자살'이 아니라 만취한 하사관에 의한 타살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타살현장에 중대간부와 사병 10여명이 있었으나 자살로 위장, 18년동안 이를 집단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 믿기지 않는 일은 완전범죄를 위해 총을 맞고 쓰러진 허일병의 사체를 폐유류고로 옮긴 뒤 다시 총을 두 번 쏘았다고 하는 대목으로 과연 우리 군내부에서 있었던 일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방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니 정확한 사건경위가 밝혀지겠지만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의 발표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래된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이는 집단범죄이기 이전에 우리 군 전체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부하사병을 총으로 쏘 살해하고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긴 당사자나 이를 보고 받고도 문책을 피하기 위해 자살로 위장하고 은폐를 지시한 군간부들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전우의 억울한 죽음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서도 조작과 은폐에 가담한 채 지금까지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병들도 공범이기는 마찬가지다. 폐쇄된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나 제대를 한 후 사회인으로 돌아와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과거 군복무 시절의 일로 묻어두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고직후 군 수사당국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했을 것이고 허 일병 아버지의 요구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군 관계기관이 여러차례 벌였음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은폐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군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군 수사당국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군내부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더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군사정권 시절 당시 '녹화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강제징집을 당했으며 이들중 자살이나 사고사로 처리된 경우가 적지않다. 허 일병 사건의 경우 다행히 아버지의 끈질긴 노력과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관심으로 은폐,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들과 동생의 죽음에 의혹을 갖고 진실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군 당국과 당시 군관계자들의 비협조로 한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18년동안 생업을 팽개친 채 이리뛰고 저리 뛰 부정(父情)을 생각하면 치미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진실을 알아낸 뒤 장례를 치르겠다며 18년동안 아들의 유골을 땅에 묻지도 않은 아버지 허씨의 심정을 살피면 군사정권시대 특유의 행태로 치부하고 넘길 수는 없다.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마땅할 것이다. 자살로 위장하고 은폐를 지시한 상급자부터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이땅의 자식들을 맡은 군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며 아들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다.

(끝)

허원근일병 살해뒤 '알리바이 조작' 교육

허일병 쏜 선임하사 징계안받아

속보=1984년 4월 육군 7사단 중대 회식 술자리에서 허원근 일병을 사살한 것으로 의문사규명위 조사에서 밝혀진 중대 선임하사관(당시 하사)이 사건발생 직후 아무런 징계도 당하지 않고 사단내 다른 중대로 전보됐으며, 90년 초 상사로 예편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예비역 상사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만취돼 총을 잡은 것 같다. 그러나 그 후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허 일병의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등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중대 안에는 장에 있던 사병 10여명에게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조작 등을 위해 역할을 분담시키는 특별교육이 있었으며, 주검을 가려주는 두 발의 총성을 들었을 때 공포에 질려 조작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당시 한 부대원이 위원회에서 진술했다. 의문사규명위는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한 장교가 허 일병이 마련한 라면이 맛이 없다며 중대 선임하사를 질책하자 선임하사가 만취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당시 사건과 99년 국방부 재조사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훈 기자

기무사 또 자료공개 거부

의문사규명위 조사 불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오전 군부대내 녹화사업과 의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기무사령부를 방문했으나 기무사 쪽의 협조 거부로 실시조사는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김준곤 의문사위 제1상임위원 등 7명은 기무사 문서존안실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아무개 기무사 참모장 등은 안내는 물론, 자료목록이나 문서관리 시스템도 설명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기무사 관계자들은 문서존안실 공개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기무사는 이날 "녹화사업 관련 문서는 1992년에 소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녹화사업을 담당했던 한보안사 직원이 캐비닛 17개 분량의 자료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김훈 기자

“제2, 제3 군의문사도 규명하자”

은폐·조작에 “신병비관” “월북기도” 걸치려 재수사...유족 협박·감시도

■ 군 장막속 파묻힌 진실

지난 1984년 슬취한 간부의 총에 맞아 숨진 허영근(당시 22살) 일병의 사망원인이 군 관계자의 조직적인 은폐과정을 통해 '자살'로 처리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는 군 의문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의문사의 경우, 폐쇄공간에서 일어나 사건 은폐가 용이한데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도 대개 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돼 허 일병 사고처럼 '타살'이 '자살'로 둔갑한다는 의문이 그동안 끊이지 않아왔다. 또 유족들은 군으로부터 협박, 회유, 감시를 받는 등 이중의 고통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3년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숨진 성군관대생 이윤성(당시 21살) 일병은 당시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받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이 일병의 1주기가 되어 학생들이 추모회를 열자 군 수사기관원들이 유족들의 집으로 찾아와 "당신들이 학생들을 사주하느냐?"고 협박했다고 이 일병의 매형 박정관(47·회사원)씨는 회고했다. 이 일병의 유골은 모란공원 납골당에 안치되었는데, 학생들의 현화와 추모가 잇따르자 또다른 후환을 걱정한 가족들이 유골을 감물에 뿌려야만 했다고 박씨는 덧붙였다. 이 일병의 어머니는 외아들의 죽음을 괴로워하다 여러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또 83년 녹화사업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자살한 것으로 조사된 한희철(당시 22살) 일병의 가족들도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감시 등으로 고통을 당해왔다. 아버지 한상훈(75·경기도 성남시)씨는 "군 수사기관원들이 집에 드나들며 동태를 감시했고 전화도 도청했다"며 "이들을 화장할 때도 정복군인들이 '빨리 하라'고 독촉했다"고 말했다.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2)씨도 진상규명 과정에서 군 헌병대로부터 "백번 천번 탄원해도 소용없다. 몸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의문사 규명위원회의 조사내용을 보면, 허 일병 사건 수사의 경우 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군 관계자들의 진술만을 받



“못들어갑니다” 21일 오전 서울 중로구 소격동 기무사령부 앞에서 실시조사를 위해 방문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준곤 상임위원(오른쪽)과 안병욱 위원(가운데) 등 조사단이 군 관계자로부터 “정문 통과가 어렵다”며 제지를 받고 있다. 임종진 기자 stepano@hani.co.kr

아들었다. 사단 헌병대는 허 일병이 스스로 세 발을 쏘아 자살한 것으로 결론 지었으나, 자살자가 양쪽 가슴과 머리에 단발로 세 번을 격발할 수 없다는 단순한 상식은 무시했다. 또 '총성이 두 번 들렸다'는 부대원 진술과 탄피 두 개를 자살증거로 제시했으나, 주검의 사입구가 세 개였음도 고려되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친 상급 수사기관의 재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85건의 사건 중 군 의문사는 28건이다. 이 중 19건의 조사가 벽에 부딪친 채 위원회의 법정시한이 임박해 있다. 대

학생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따른 의문의 죽음 6건은 모두 녹화사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 82년 7월부터 83년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죽음은 모두 '군생활 염증', '생계비관', '기합반발' 등을 동기로 한 자살로 당시 발표됐다.

한편, 지난 99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95~98년에 군대 내에서 사고로 숨진 군인은 각각 330명, 359명, 273명, 248명으로 이중 매년 92~103명이 자살로 처리됐다. 자살원인은 대개 '염세', '신병비관' 등이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의문사 자료 공개하라” 최근 자살 조작사실이 밝혀진 허원근씨의 부친 허영춘씨와 의문사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기무사령부 앞에서 군복무 중 사망사건에 대한 기무사의 자료공개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정동 기자

“허원근일병 自殺조작 과정 상급부대 개입 가능성”

의문사추 “중대장이 알리바이·증거조작 지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1일 지난 84년 허원근 일병이 당시 중대 선임하사의 총에 맞아 숨진 이후 자살로 조작되는 과정에 연대급 이상 상급부대의 지휘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와 관련, “사고가 일어난 84년 4월 2일 오전 4~6시 사이 허 일병의 소속 중대가 상급부대인 대대 및 연대 상황실에 유선으로 사

고 상황을 보고했다”는 당시 상황병들의 진술을 공개했다. 보고 내용은 ‘전령, 소총 1회 발사 자살’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조사한 7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2일 오전 10~11시 사이에 순찰을 돌던 중대장이 ‘두 발의 총성’을 들었고, 오후 1시 20분쯤 허 일병이 부대 내 폐유류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돼있어 상급부대가 보고를 받은 시점과 보고 내용이 상황병들의 진술과 다르

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사고 직후 중대장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10여명의 사병들을 상대로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 조작을 위한 역할 분담을 시켰다”는 한 사병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일병에게 총을 쏜 것으로 밝혀진 당시 선임하사는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사건 후 사단 내 다른 중대로 전보됐으며 상사로 승진, 92년 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84년 허원근 일병 자살 조작 상급부대 간부 개입 의혹

의문사진상규명추 제기

2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지난 1984년 허원근 일병이 사망할 당시의 상황은 중대본부에서 술을 마신 중대 간부 외에도 중대본부 주변과 인근 내무반에 있던 8명의 사병 등 모두 11명이 목격했고 이후 상황을 보고받은 대대급 간

부까지 사건은폐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4월 2일 오전 2~4시쯤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 서는 휴전선 야간경계 근무시간임에도 한 초소장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중대본부에서 술파티가 열렸다. 당시 모 중대장이 “라면이 맛이 없다”며 모

선임하사를 질책하자 문제의 하사관은 만취상태에서 중대본부를 나와 행패를 부리다 허일병을 향해 무법적으로 자신의 M16 소총을 발사, 허일병은 오른쪽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근무지 이탈 및 술파티에 대한 문책이 우려되자 대대급 간부들까지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허일병이 낮시간에 자살한 것으로 처리키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있던 사병들에게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조작 등을 위해 역할을 분담시키는 특별교육이 있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하은해기자



21일 오전 서울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앞에서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 허원근씨 사망 조작사건의 실지 조사 협조와 기무사령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kdaily.com

'허일병' 연대·사단 간부 조사

의문사규명위 "은폐 가담 가능성"

기무사 거부 녹화사업 조사 무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현상범)는 군 부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실이 18년 만에 드러난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사건 은폐 과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당시 허 일병의 소속 연대와 사단급 간부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21일 "군부대의 지휘계통을 감안할 때, 독립된 전투단을 구성하는 연대급에서 소속 중대에 서 일어난 일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대대장뿐만 아니라 연대장까지도 사건 은폐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현병대 수사과정에서 사단장의 임금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단급 지휘관과 참모선도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규명위는 사건의 은폐조작을 위해 허 일병 사망 직후 대대급 간부까지 참여한 대책회의가 열렸고,

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특별교육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망 현장에는 회식에 참여한 중대 간부 외에도 중대본부 주변에 있던 8명의 사병 등 모두 11명의 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일병을 쏜 것으로 알려진 하사관은 사건 직후 아무 징계도 당하지 않고 사단내 다른 중대로 전보된 뒤 승진해 90년초 상사로 예편했고, 최근 위원회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총을 잡은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총을 쏘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준곤 상임위원 등 규명위 관계자 7명은 5공화국 시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관련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군기무사령부를 방문했으나 기무사측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기무사측은 "강제 징집제도는 정부부처 주도로 실시됐으며 84년 9월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안사 담당부서도 해체되고 녹화사업 관련자료도 대부분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84년 군복무중 상관 총에 사망

허원근일병 국립묘지 안장

지난 1984년 군부대 술자리에서 상관의 총격으로 숨진 허원근 일병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일병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적어 민주화보상심의위를 통한 금전적 보상 등은 어렵지만 국립묘지 안장과 군부대의 사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당시 군부대가 허일병의 사망을 자살로 조작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사병들을 대상으로 '알리바이 조작' 특별교육을 시켰다고 밝혔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의문사 자료 공개하라"

자살조작사건이 밝혀진 고 허원근일병의 부친 허영춘(뒷줄 오른쪽)씨와 의문사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기무사령부 앞에서 군복무 중 사망사건에 대한 기무사의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정현기자 theos@munhwa.co.kr

의문사규명엔 시효가 없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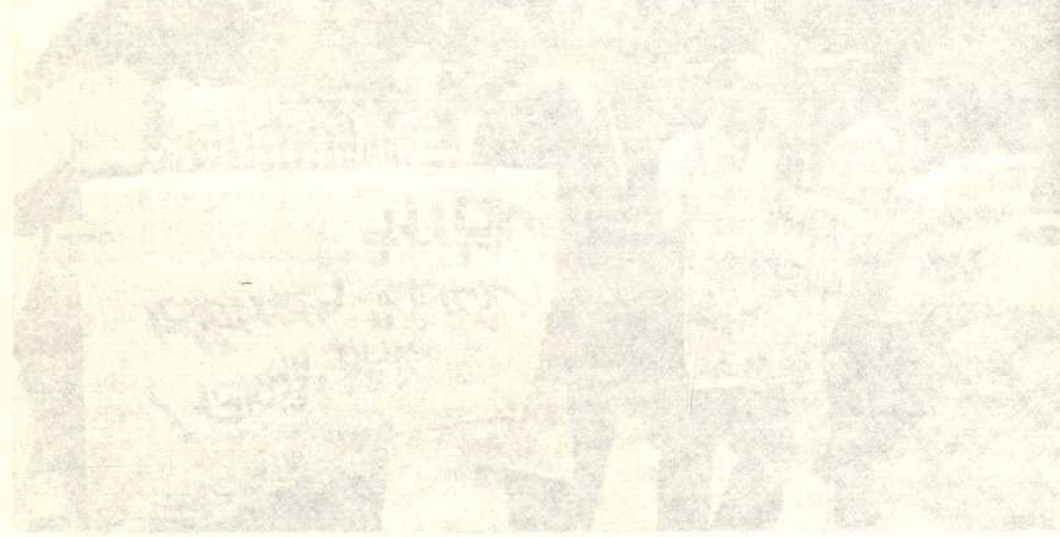
1984년 자살로 발표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이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군부대 회식중 술취한 하사관의 M16소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허 일병을 상급자가 살해한 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조작한 게 사실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군수사당국이 그동안 도대체 무얼 했기에 시신에 총질까지 한 타살사건이 자살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허 일병의 사망은 그가 소속됐던 7사단과 2군단 헌병대뿐 아니라 육군범죄수사단 조사에서도 자살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장 재조사를 벌여 가해자는 말할 것 없고 이 사건 조작-은폐와 부실수사 관련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8년 전 일이고 당사자들이 대부분 전역을 했다지만 허 일병이 총맞는 것을 본 사람이 10명도 넘는다면 진상규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이다.

의문사진상조사위에 접수된 사건만도 83건이나 된다. 이중 종결된 것은 24건에 불과하다. 허 일병의 경우 그나마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생업까지 내팽개친 허영준씨가 각고의 노력 끝에 쟁취한 결실이다. 나머지 59건은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출석거부 등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조사위 활동이 오는 9월16일로 끝난다.

우리는 의문사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을 대폭 연장하고 그 권한을 더 강화해 나머지 사건들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시효에 관계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다.



허원근 일병의 사망사건이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군부대 회식중 술취한 하사관의 M16소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허 일병을 상급자가 살해한 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조작한 게 사실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군수사당국이 그동안 도대체 무얼 했기에 시신에 총질까지 한 타살사건이 자살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간부들 술파티 숨기려 조작

허원근씨 '살해 은폐' 상급부대도 관여한듯

의문사규명위 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1984년 군 내무반에서 사망한 허원근 일병의 자살 조작 사건과 관련, 대대와 연대는 물론 사단급의 상급부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당시 해당부대 장교와 하사관들이 무단 근무지 이탈과 술파티를 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사건을 조작했으며, 피살 현장을 목격한 사병들뿐 아니라 중대원 모두를 대상으로 사건 은폐를 위한 특별교육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규명위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서는 휴전선 야간 경계근무 시간임에도 중대본부 차

원에서 4곳의 초소중 장모 초소장의 진급을 축하하는 술파티가 열렸다. 규명위는 당시 김모 중대장이 "라면이 맛이 없다"며 모 선임 하사를 질책하자, 문제의 하사관은 만취상태에서 내무반으로 와 행패를 부리다 허 일병을 향해 우발적으로 자신의 M16 소총을 발사했으며 당시 술을 마신 3명의 중대 간부 외에도 내무반에 있던 8명의 사병 등 모두 11명이 허 일병의 사망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대급 간부들은 이후 대책회의를 갖고 근무지 이탈과 술파티에 대한 문책이 우려되자 허 일병이 낮시간에 자살한 것으로 처리키로 했으며, 이 회의에는 오전 4~6시 보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대

급 간부들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社說

의문사 규명에 협조하라

18년 만에 밝혀진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 진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술 취한 하사관의 총에 맞아 숨진 것도 억울한 일인데, 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자살로 조작했다니 이라고도 대한민국 군대인가 싶다. 힘없는 집 아들은 군대에 가고, 거기서 억울하게 죽어도 사인조차 조작된다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해당 부대의 장교와 하사관들은 야간 경계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였고, 장교로부터 안주가 부실하다고 질책당한 하사관이 허 일병을 구타하려다 총이 발사됐다 한다. 이들은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에 2발의 총질까지 더해 자살로 조작했다.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는 대체 눈을 뜨고 있었나 감고 있었나.

국방부가 육군검찰단에 재조사를 지시했으니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사건의 개요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지만, 은폐·조작과 군당국의 처리과정은 아직 세세히 드러나지 않

았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 사건 말고도 진상이 규명돼야 할 의문사는 아직도 많다.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관계기관들은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21일에도 기무사를 방문, '녹화사업' 관련 사망사건에 관한 문서 규정집과 당시의 자료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무사는 이미 10년 전에 자료를 소각했으며 문서규정집은 기밀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의문사위는 7일에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시도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 법을 고쳐서라도 의문사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시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의문사 덮으려는 세력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대학생들의 진실을 밝히려고 기무사령부를 방문했으나 실지조사가 무산됐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와 관련한 의문사는 이른바 '녹화사업' 11건에 이르는 데도 기무사는 "녹화사업 관련자료를 지난 92년 모두 폐기해 자료가 없으며 문서규정집은 기밀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녹화사업 당시 보안사 담당자가 "녹화사업 심사자 1천여명과 전체 관련자 5천여명의 존안자료를 인수인계했으며, 이는 영구문서로 보존돼 기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위원회에서 증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제는 기무사의 자료 공개 거부가 술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죽은 허원근 일병을 군이 18년 동안 자살로 은폐한 사건이 밝혀진 직후에 일어났다는 데 있다. 군이 허 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전우의 주검에 총을 두 발 더 쏘는 만행을 저지르고, 현장에 있던 사병들에게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 조작을 위해 특별교육까지 한 사실마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녹화사업 의문사의 '중심'에 있는 기무사가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아랑곳하지 않는 행동이다.

대통령직속 의문사규명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하면서 기무사는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 없다"거나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며 사뭇 당당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군 내부의 일이기에 더러 극비보안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녹화사업이 과연 그런 성격인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의문사와 관련한 실지조사 거부는 비단 기무사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도 의문사규명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했다. 법을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검사들조차 의문사규명위의 동행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무사의 거부는 왜 의문사규명위 활동이 연장돼야 하고 왜 권한이 강화돼야 하는지 오히려 입증해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외부자문위원 회의에서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 미루어 법 개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의문의 죽음을 덮으려는 세력에 맞서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허일병 알리바이 조작 사단헌병대 개입 의혹

사망시각 새벽인데 "오전 10시까지 내무반 생활"
오전 7시 '보고'했는데 "오후 1시20분 사고발생"

목격사병들 조사뒤 포상휴가
속보=허원근 일병 피살 사건의 조
작·은폐 과정에서 사건 발생 초기에
이 사건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당시
관계자들이 서로 입을 맞춰 허 일병의
알리바이까지 치밀하게 조작한 것으

로 드러났다. 또 이 사건을 조사한 사
단 헌병대 중상급부대가 이 과정에 함
께 개입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2일 허
일병이 1984년 4월2일 중대본부 술자
리에서 선임하사가 쓴 총을 맞고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에 숨졌으나, 이 사
건을 초기에 조사한 사단 헌병대의
수사기록은 허 일병이 이날 오전 10
시계까지 내무반 생활을 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 수사기록
을 보면, 허 일병은 2일 오전 8시계 중
대장으로부터 전무복 상의가 잘못 쓴
질때 있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았
으며, 9시30분께 한 고참병이 중대장
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
살을 결심한 것으로 돼 있다. ..
또 사건 직후 사고현장 목격 사병

18명은 즉집계로 머리카락이 뽑히고
무릎을 짓밟히는 등 15일 동안 가혹
행위를 동반한 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이들 사병이 모두 '조
사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2~4일씩 포상휴가를 다녀온 사
실도 확인됐다고 규명위는 밝혔다.
이밖에 허 일병 사건이 오전 7시계 연
대에 '자살사건'으로 보고됐고 이날
오전중 사단 단위까지 보고됐음에도,
사단 헌병대 조사에서 사고발생 시간
이 오후 1시20분으로 처리된 수사결
과에 대해 사단, 연대에서 아무런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도 규명위는
밝혀냈다.
한편, 허 일병은 "내성적이고 열세
적이었다"는 헌병대 기록과는 달리 명
량하고 친화력이 좋아 중대 안에서 인
기가 높았던 것으로 당시 부대원들은
증언했다. 김훈 기자 hoonsk@hani.co.kr

허일병 타살 목적 소대원들 헌병대 고문후 포상휴가

1984년 군 복무 중 숨져 자살처리
됐다 최근 타살된 사실이 확인된
허원근(당시 22세·일병)씨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소대
원 전원이 헌병대에 끌려가 가혹행
위를 당했으며 이후 포상휴가를 받

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상급부대가 나서 사건
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
혹이 짙어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
회(위원장 韓相範)는 22일 "허일병
의 소대 동료들로부터 '사건 직후 소
대원 8명이 사단 헌병대로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뒤 풀려났다'는 진
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대원들은 사건이 발생한 4월 2
일부터 2주간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
으며 허벅지와 장딴지 사이에 붕을
끼운 채 다리를 밟히고 귀 옆 머리카
락을 집중적으로 뽑히는 등의 고문을
당한 뒤 "조사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것이다. 또
석방된 뒤 3~4일씩의 포상휴가를
받았다고 규명위는 주장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허일병 他殺목적 사병8명 헌병대 조사후 포상휴가

의문사추 “軍 은폐의혹”

1984년 술 취한 하사관(현 부사관)이 쓴 총에 맞아 사망한 허원근(許元根) 일병의 자살조작 사건(본보 21일자 A30·31면 보도)과 관련해 당시 군 내무반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이 헌병대의 조사를 받은 직후 포상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군부대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2일 “사건 직후 군 사단 헌병대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병 8명을 상대로 2주간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가 끝난 뒤 이 사병들이 3, 4일씩 포상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헌병대는 사병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게로 머리카락을 뽑고 무릎 사이에 곤봉을 끼워놓고 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조사가 끝난 뒤 ‘관련 사실을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의문사위측은 덧붙였다.

또 의문사위는 사단과 연대측이

사건 당일 오전 허 일병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사단 헌병대 조사에서 사고 발생시간을 이날 오후 1시20분으로 처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사건 당일 오전 2~4시경 허 일병이 사망한 이후 대대급 간부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이 사건을 자살로 은폐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7시경 연대에 자살사건으로 보고했으며 이어 이날 오전 중 사단에도 보고됐다는 것.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오전 중 보고를 받은 연대와 사단측이 사고 발생시간을 오후로 처리한 사단 헌병대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상급 부대에서도 사건 전말을 알면서 이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문사위는 허 일병이 하사관이 쓴 첫 총탄에 맞은 뒤 그 자리에서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허 일병에게 추가로 총 두 발을 쏘도록 한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방침이다.

손호림기자 aryssong@donga.com

“허일병 他殺목적 사병들 헌병대 조사뒤 포상휴가”

의문사추 “심한고문 당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지난 84년 허원근 일병이 당시 중대 선임하사의 총에 맞아 숨질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병 8명이 사고 직후 15일 동안 사단 헌병대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며 이후 모두 2박3일~3박4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목격 사병들에 대한 이 같은 고문과 포상휴가 조치는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자살 조작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병 8명은 사고 이튿날인 84년 4월 3일 육군 7사단 헌병대에 수감돼 족집게로 머리카락을 뽑히고, 장판지와 허벅지 사이에 곤봉을 끼워놓고 꿰어앉은 상태에서 허벅지를 밟히는 등의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사단 헌병대는 고문 과정에서 사병들에게 “허 일병을 내가 죽였지”라고 추궁해 사병들이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또 사고현장 목격 사병들은 “조사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3~4회에 걸쳐 썼다고 의문사위는 전했다.

/廉康洙기자 ksyoun@chosun.com